



주간통일정세 2010-47(2010.11.15~11.21)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0-47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1. 대내정세

가. 정치

- **北, 김정은 주도로 전국에서 간부층 비리 조사(11/16, NK지식연대)**
 - 이달 들어 북한에서 후계자 김정은(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주도로 대대적인 간부층 비리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NK지식인연대가 전함.
 - 이 단체는 북한 내부 통신원의 전언을 인용, 지난 5일부터 1주일 간 함경북도 당 조직부와 검열위원회가 무산군에 대한 집중검열을 벌여, 군 당과 보안서, 보안기관 등의 간부 15명 이상을 탈북 목인, 뇌물수수, 밀무역 등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힘.
 - 적발된 간부 중에는 무산군 보안서(경찰서 격)의 오이현 서장(대좌), 박용남 공민등록과장(상좌)과, 보안부의 김성철 감찰과부과장(중좌) 등이 포함돼 있다고 이 단체는 덧붙임.
 - 이 단체 통신원은 “조사를 받고 있는 간부 대부분이, 보안기관과 국경연합지휘부를 총괄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온 ‘111지조’ 소속”이라면서 “이들은 뇌물을 받고 탈북을 목인하거나 불법으로 밀무역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대부분 감옥에 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 ‘111지조’는 당, 보안기관, 행정기관의 간부들이 망라돼 있는 검열기관으로, 국경연합지휘부를 통해 주둔지 군대와 경비대까지 지휘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이 단체는 설명
 - 이 통신원은 또 “김정은의 주도 아래 비리간부에 대한 검열사업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불뚱이 어디로 튈지 몰라 간부들이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라고 말함.
- **北김정일, 평북도 창성군 현지도(11/17,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평안북도 창성군의 공장들을 현지도
 - 김 위원장은 이날 창성식료공장과 창성직물공장을 둘러보고 지방 자체의 원료를 이용해 주민들이 필요한 식료품과 천 등을 원만히 공급할 것을 강조함.
 - 그는 또 문화회관을 돌아보는 한편 군 예술소조 공연도 관람했다고 북한방송들은 밝힘.
 - 현지도에는 노동당 정치국 위원인 홍석형(당 비서 겸직)·김경희(당 경공업부장 겸직), 당 정치국 후보위원인 장성택(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직)·태중수(당 비서 겸직)·김평해(당 비서 겸직), 리만건 평안북도 당위원회 책임비서가 수행



- 방송은 현지지도 수행자 명단을 밝히면서 군부대 시찰에 동행했던 후계자 김정은은 거명하지 않음.
- **北김정은, 군수공장 시찰하며 CNC 독려(11/18, 자유아시아방송(RFA))**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 김정은(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군수공장들을 시찰하면서 CNC(컴퓨터수치제어) 도입을 독려하고 있다고 방송이 전함.
 - 북한 군수공장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RFA에 “김정은이 최근 함경북도 와 자강도 내 군수공장들을 비공개로 시찰했다”면서 “이와 관련 당 중앙군사위가 2경제(군수경제)위원회와 인민무력부 산하 군수공장들에 ‘CNC 도입의 본보기가 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함.
 - 북한에서 ‘CNC’는 후계자 김정은의 업적을 상징하는 용어로 알려짐.
 - 이 소식통은 이어 “김정은이 방사포탄 생산공정의 CNC화 정형을 보기 위해 함경북도 청진시 라남 구역에 있는 라남탄광기계연합기업소를 방문한다고 해, 준비를 하느라 공장이 바꿨다”면서 “이 연합기업소는 탄광 기계를 생산하는 것처럼 꾸몄지만 실제로는 122mm 다연장 방사포를 생산하는 군수공장”이라고 덧붙임.
 - 또 다른 소식통은 “얼마 전 김정은이 평안남도 성천군의 비류강전기공장을 둘러보고 ‘미사일 발사체계를 원격조정으로 개조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에 따라 공장은 조종로봇 제작에 들어갔고, 노동당 군수공업부는 전국의 군수공장 지배인들을 불러 모아 개조 과정을 참관하도록 했다”고 밝힘.
 - 이 소식통은 “공장 방문이 결정되면 ‘영명하신 청년대장 김정은 동지의 현지지도 준비사업을 잘할 데 대하여’라는 지시가 내려진다”면서 “해당 공장에서는 과거 김일성, 김정일의 현지지도 때처럼 기계도색, 작업장 정리, 노동자 기숙사 정돈 등 최상의 수준으로 준비를 한다”고 전해짐.
 - 김정은이 시찰을 나가는 공장에는 ‘김정은 청년대장의 배려’라는 선전과 함께 원자재 및 식량 추가 공급, 밀린 노임 지급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고 방송은 전함.
- **北김정일 부자, 모범 인민내무군과 기념촬영(11/20, 조선중앙TV)**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공안기관인 인민보안부(경찰청 해당)의 ‘인민내무군 열성자대회’ 참가자를 만나 기념촬영을 함.
 - 방송은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인민내무군 열성자대회 참가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셨습니다”면서 후계자 김정은(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동행했다고 밝힘.
 - 북한 매체들은 “김정일 동지께서 지난 60여년간 수령결사옹위의 제1선부대, 당의 내무군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해 온 내무군 군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했다”면서 “인민내무군 군인들이 우리 당의 정치보위자로서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를 목숨 바쳐 수호해 가리라는 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다”고 말함.

-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당 상무위원,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겸직), 김기남·최태복 당 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주상성 인민보안부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당 행정부장 겸직), 리병삼 인민내무군 정치국장이 수행

■ 김정일동향

- 11/15 김정일·김영남, 시리아 ‘시정운동’ 40돌 즈음 同國 대통령(바사르 알 아사드)에게 축전 발송(11/15, 중통·중방)
- 11/17 김정일, 평북 창성군內 공장들(창성식료공장, 창성직물공장, 창성군 문화회관) 현지지도 後 창성군 예술소조공연 관람 및 「감사」전달(11/17, 중방·중통)
 - 리만건(平北道黨 책임비서), 홍석형(黨비서), 김경희(黨부장), 장성택(국방총 부위원장), 태종수·김평해(黨비서) 등 동행 및 림진섭(창성군黨 책임비서), 강명학(창성군 인민위원장) 등 현지영접.
- 11/17 김정일, 김학철(炭夫) 등 “선군시대 모범선동원들”에게 「감사」전달(11/18, 중방)
- 11/18 김정일, 618건설돌격대를 성실히 지원한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전달(11/19, 중방)
- 11/20 김정일, 모범 인민내무군과 기념촬영(11/20, 중방)
 -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당 상무위원,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겸직), 김기남·최태복 당 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주상성 인민보안부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당 행정부장 겸직), 리병삼 인민내무군 정치국장이 수행

■ 김정은동향

- 11/18 김정은, 함북 및 자강도 내 군수공장 비공개 시찰(11/18, 자유아시아방송(RFA))
- 11/20 김정은, 모범 인민내무군과 기념촬영(11/20, 중방)

■ 기타 (대내 정치)

- 北 黨창건 행사時(10/10, 열병식·축포·경축행사 등) 美 CNN 등 취재를 통해 “세계는 이 땅(北)에서 무한한 힘의 분출과 상승기운을 보았다”며 ‘조선식 사회주의(黨·우리식·백두의 혈통·일심단결 등) 강성부흥 확신’ 선전(11/13, 노동신문·11/16, 중방)
- “당의 사상과 노선을 생명선으로 투쟁하며, 선군의 길만이 불패의 강국을 일떠세우는 길”이라고 쏜민의 김정일 ‘선군영도’ 추종과 ‘군대의 모범을 본받을 것’ 강조(11/16, 중통·노동신문)



다. 사회·문화

● 北TV,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팔레스타인전 첫 방영(11/15, 조선중앙TV)

- TV는 15일 밤 9시 40분부터 1시간가량 제16회 광저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조별리그 C조 2차전에서 북한팀이 팔레스타인을 3-0으로 이긴 경기를 녹화중계로 내보냄.
- TV가 동영상으로 북한팀의 경기를 내보낸 것은 이것이 처음
-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은 남자축구팀이 한국과 팔레스타인, 요르단을 차례로 꺾고 3연승을 거두며 16강 진출을 확정 지은 사실은 즉각 보도했음.

● 北, 국가주도 통제·관리 강화 지속(11/16, 연합뉴스)

- 북한이 올해 인민경제계획법과 평양시관리법 개정 등을 통해 국가주도의 통제·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대북소식통은 이날 “북한이 지난 4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제748호를 통해 개정된 인민경제계획법을 포함해 4개 법안을 최근 입수했다”며 “이번 인민경제계획법 개정에는 계획경제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기조가 반영돼 있다”고 밝힘.
- 실제 입수된 인민경제계획법 개정안은 16조와 18조, 24조에서 과거 계획경제의 규율을 강조하는 ‘예비숫자’와 ‘통제숫자’라는 용어가 다시 사용됨.
- 인민경제계획법 개정안은 또 17조에서 “계획 작성 과정에서 생산단위의 의견을 상부로 전달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계획이 위에서 아래로 일방적으로 하달되는 과거의 내용을 그대로 부활시키는 한편 27조에서 계획의 법적 이행의무를 강조
- 북한이 지난 3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제743호를 통해 개정된 평양시관리법 역시 평양시 관리·운영에 있어 국가적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남.
- 평양시관리법 개정안은 4조에서 평양시의 계획적 관리원칙을 명시하고 관리계획·감독통제기관에 평양시 인민위원회 이외에 국가계획위원회(48조)와 내각(52조)을 추가함.
- 아울러 평양 주민으로 하여금 시민증을 상시 지참하도록 법규화했고 주택건설에 대한 조항(17조)과 평양시 상업망용 상품 생산에 대한 조항(51조)을 신설해 주택·상품 등에 대한 국가적 보장을 강조
- 또 함께 입수된 노동보호법과 상업회의소법 제정안에도 국가의 관리와 감독·통제를 강조하는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드러남.
- 특히 탄광과 광산·금속·임업·수산·지진탐사 등을 ‘어렵고 힘든 업종’으로 규정한 것(33조)과 8시간 노동준수(36조) 및 시간외 근무금지(37조), 명절·일요일 등 휴일 및 휴가 보장(39조), 수유시간 보장 등 여성 노동자 우대(24·28조) 등에 대한 조항이 눈에 띈.



● 北두만강변 국경지역서 ‘자살위장’ 탈북 늘어(11/18,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두만강 연안의 국경지역에서 최근 ‘자살 위장’이 의심되는 탈북자들이 부쩍 늘어, 국경경비대에 시신을 찾아 강을 수색하는 ‘행방불명자 수색 전담반’까지 등장했다고 RFA가 이날 전함.
- 함경북도 온성군의 소식통은 이 방송에 “요즘 두만강에서는 국경경비대원이 쪽배를 타고 긴 막대기로 강바닥을 훑거나, 직접 물에 들어가 시신을 찾는 장면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면서 “지난 6월 자살로 위장해 탈북한 여성이 중국에서 잡혀온 이후 유사한 탈북 사례가 늘자 국경경비대에 일명 ‘시체조’라 불리는 수색반이 가동된 것”이라고 말함.
- 이 소식통은 “온성군 문화회관의 예술선전대에서 일하던 이 여성의 옷과 신발이 두만강변에서 발견되고, 남자 친구와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나 자살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었는데, 중국으로 탈북한 뒤 한 달도 못돼 온성군 남양세관으로 압송돼 왔다”면서 “하지만 보위부 조사 과정에서 ‘자살하려고 했는데 눈을 떠보니 중국 사람 집이었다’고 주장해 ‘2개월 노동단련대형’이라는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고 덧붙임.
- 이 소식통은 또 “이 소문이 퍼지면서 7월에는 온성군 남양면의 한 가족이 두만강변에 유서와 신발만 남겨놓은 채 사라졌고, 10월 중순에는 국경경비대의 한 소대장이 군관학교에 갈 수 없게 된 것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서를 써놓고 종적을 감췄다”고 전함.
- 온성군의 또 다른 주민은 “(탈북자들이) 자살처럼 꾸미는 것은 중국 공안에 붙잡혀 복송될 경우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한 속임수”라면서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국경경비대 수색반이 두만강을 샅샅이 훑고 있지만 그들이 자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RFA에 말함.

● 北, 올해 국제 과학저널에 역대 최다 논문 발표(11/19, 연합뉴스)

- 북한이 올해 국제 과학저널에 역대 최다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술정보운영팀에 따르면 올해 들어 북한 과학자들은 총 26편의 논문을 국제저널에 발표
- 이는 북한이 국제저널에 첫 등장한 1976년 이후 가장 많은 연간 논문발표 수라고 전함.
- 북한은 1976년 2편을 발표한 뒤 1977~1981년, 1985년, 1994년, 1998년, 2002~2003년 등에는 1편의 논문도 국제저널에 발표하지 않기는 했지만 그동안 모두 143편의 논문을 국제저널에 실음.
- 올해 논문 26편은 광학과 나노기술, 유체역학, 재료공학, 바이오·의학, 우주론과 수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음.
- 26편의 논문 중 사이언스나 네이처 등 최고 권위의 저널에 실린 논문은 없었음.



- 14편은 중국과의 공동 연구였으며 나머지 12편은 스위스, 호주, 일본, 독일, 말레이시아 등과의 공동 연구였음.

● 北고위층, ‘남한문화’ 만연…단속효과 없어(11/19,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당국이 남한 제품이나 영화, 음악을 엄격히 단속하는데도 고위층은 자유롭게 남한 문화를 즐기고 있다고 방송이 보도
- 평양에 사는 중국인 조모씨는 이 방송에 “남한 물건이나 영화·노래 ‘알판’(CD)을 가장 많이 구입하는 계층이 고위 간부와 그 가족들”이라면서 “그런데도 당국은 너무 비싸 이런 물건을 살 엄두도 못내는 일반 주민들만 단속한다”고 전함.
- 북·중 무역업을 하는 중국인 정모씨는 “중국에서 제작된 CD가 많이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옛날 얘기”라면서 “최근에는 위성안테나로 남한TV를 볼 수 있는 평양의 고위간부 자녀들이 드라마나 영화를 녹화한 뒤 CD로 만들어 파는 경우가 많다”고 밝힘.
- 정씨는 “실제로 한국 물건과 문화를 많이 접하는 간부 계층은 항상 단속 대상에서 제외 된다”면서 “적발된 남한 CD의 출처가 고위 간부로 드러나면 조사 자체가 흐지부지될 정도”라고 덧붙임.
- 방송은 “북한의 간부층에 이미 남한문화가 뿌리를 내려, 단속 강도를 높여도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입을 모은다”고 전함.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北평양무용대학, 선군시대 기념비적 창조물로 새로 개건(11/15, 중통)
- 咸北 회령시, 토끼전문식당·강냉이음식전문식당·회령온반집 등 18개의 ‘사회급양봉사시설’ 새로 건설(11/15, 중통)
- 北 옥류관 요리전문식당, 11/15 개업소식 보도(11/15, 중통·중방)
- 北 역도 ‘김금식’ 선수, 11/15 아시안게임 68kg급 경기에서 금메달 획득(11/16, 중통)
 - 北 남자역도 김은국·차금철, 여자유도 설경의 은메달 소식 등 15일 현재 은메달 4개, 동메달 9개 획득 보도
 - 北 축구대표팀, 11/16 베트남팀을 2:0으로 이기고 8강 진출 보도(11/16, 중방)
- 北 男·女선수들, 11/16-17 진행된 아시안게임 사격(男단체, 男·女개인)과 男역도 경기에서 금메달 4개 등 획득(11/17, 중통)
 - 北, 黨 창건 65돌 경축 전국체육축전에서 세계기록(여자사격) 갱신을 포함한 10여개의 새 기록을 수립했다고 선전(11/17, 중통)
 - 北 여자축구팀, 11/16 태국팀에 승리 소식 보도(11/17, 중방)



- 北·루마니아 ‘문화·교류·과학·체육 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협정’, 평양에서 조인(11/18, 중통·중방)
- 北 축구팀의 ‘아시아 19세미만, 16세미만 축구선수권대회 우승’ 성과는 “나라의 정연한 선수후비육성체계에 의해 이룩된 결실”이라고 자랑(11/18, 중통)
 - 北 여자축구팀, 11/18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준결승 진출 보도(11/18, 중통)

2. 대외정세

가. 일반

- 北통신 “美 대북정책전문가 대표단 평양도착”(11/15, 조선중앙통신)
 - 지난해 2월 방북했던 모튼 아브라모위츠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평양에 도착
 - 통신은 이날 “센츄리기금(재단) 상급연구사 모튼 아브라모위츠를 단장으로 하는 미국 대조선(대북)정책 전문가 대표단이 평양에 도착했다”고 짧막하게 전했다. 방북 일정이나 목적, 공항에서의 영접인사 등은 밝히지 않음.
- 北, 을사조약 105주년 ‘일제 죄행록’ 발표(11/16,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을사조약(1905.11.17) 105주년을 맞아 ‘일제의 조선민족말살 죄행록’을 발표하고 주민 학살, 민족동화정책(민족말살정책), 물자약탈 등을 상세하게 언급하며 “일본은 과거 죄행에 대해 조선민족 앞에 성근(성실)하게 사죄·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
 - 통신에 따르면 죄행록은 “일제가 우리나라에 대한 군사적 강점기간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은 조선사람들을 잔인무도하게 학살한 것”이라면서 “조선사람 100여만 명을 학살하고 1938년 이후에 840여만 명을 납치, 연행했다”고 지적
 - 죄행록은 또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인민을 질식시키기 위해 무자비한 물적 자원약탈행위를 감행한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1902년부터 1945년 7월까지의 기간에 7억 6천940만㎡에 달하는 목재와 1910~1942년 기간 수산물 1천432만t(양식 생산물은 제외, 당시 금액으로 11억 260여만 엔)을 약탈해 갔다고 밝힘.
 - 이어 “조선인민이 일본의 식민지통치로 하여 당한 정신적, 인적, 물적 피해는 그 형태와 내용, 규모에 있어서 참으로 인류역사에 전무후무한 최대 최악의 것”이라며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일본의 죄악을 총결산할 의지에 차있다”고 경고



- **北, 美여행사 금강산관광 모객 허용(11/16, 미국의 소리(VOA))**
 - 북한이 내년에 미국 여행사를 통한 미국인들의 금강산관광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VOA가 보도
 - 북한 관광상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미국 '아시아태평양여행사'의 월터 키츠 대표는 이날 이 방송에 "최근 미국인 단체관광객들과 함께 북한에 갔을 때 북한 당국자로부터 '금강산 내 시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란 말을 들었다"면서 "미국인들의 금강산 단체관광을 내년에 추진할 계획인데, 북한 당국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함.

- **美, 北39호실 소유...대성은행 등 2곳 제재(11/19, 연합뉴스)**
 - 미국 재무부는 18일 북한 '노동당 39호실'이 소유하고 있거나 통제하고 있는 북한의 조선대성은행과 조선대성무역총회사 등 2곳을 제재대상 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발표
 -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두 기관을 제재대상 리스트에 추가하면서 이들 기관의 주소와 사용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자세히 공개함.
 - 이날 제재대상에 추가된 조선대성은행은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의 자금관리처인 '노동당 39호실'이 소유하고 있는 대외결제은행이며, 대성무역총회사는 39호실의 불법거래에 이용된 위장회사로 알려짐.
 - 재무부는 "조선대성은행은 북한의 불법적 금융프로젝트에 개입했으며, 조선대성무역총회사는 39호실을 대신해 대외거래를 하는데 이용됐다"고 밝힘.
 - 재무부는 노동당 39호실이 불법적 경제활동 관여와 비자금 관리, 지도부를 위한 수익 창출 등을 통해 북한 지도부에 핵심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비밀 기관이라고 전함.
 - 스텐더트 레비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은 성명을 통해 "조선대성은행과 조선대성무역총회사는 북한의 불법적이고 위험한 활동을 지원하는 39호실의 금융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라고 밝힘.
 - 이어 레비 차관은 "재무부는 북한의 확산 및 다른 불법적 활동에 개입된 금융네트워크 기관을 추적하고 활동을 막기 위해 계속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힘.

- **유엔 제3차, 대북 인권결의 채택...北, 반발(11/19, 연합뉴스)**
 -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대북 인권결의안이 18일(현지시간)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됨.
 - 고문과 비인간적인 구금 상태 등 북한의 인권유린을 비난하고 이 같은 상황의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대북인권결의안은 표결에 부쳐져 찬성 103, 반대 18, 기권 60표로 통과됨.



- 남한 정부는 이번 대북 인권 결의안에도 공동제안국의 일원으로 참여해 찬성표를 던짐.
 - 유럽연합(EU)과 일본이 공동 제출해 채택된 이 결의안은 내달 초 유엔총회 본회의로 넘겨져 표결에 부쳐짐.
 - EU 대표는 이날 제안 발언에서 “2005년 이후 북한 인권결의안이 계속 채택되고 있지만, 심각하고 조직화되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특히 올해는 북한 당국이 식량을 제대로 배분하지 않으면서 곡물 재배와 식량 거래마저 금지해 자연재해를 당한 북한 주민들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심각하게 걱정된다”고 우려함.
 - 결의안은 이어 “최근 북한이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보건기구(WHO) 및 유엔아동기금(UNICEF) 등 유엔 월조기구들과의 협력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과 같은 긍정적 진전이 일부 있다”고 평가했지만, “이는 매우 미미한 것이며 광범위한 인권 침해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함.
 - 지난해 결의안과 비교할 때 올해 결의안에는 최근 이산가족 상봉을 평가하면서 “앞으로 더 큰 규모로, 정기적으로 이뤄지도록 남북 간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는 내용과, 지난해 12월 제네바에서 채택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를 북한이 거부한 것과 관련 “북한 정부가 인권이사회의 UPR 권고 사항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또한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유감을 표시한다”는 내용이 추가됨.
 - 이에 대해 북한 유엔대표부의 박덕훈 차석 대사는 표결 전 발언에서 “서방국가들이 선택적 이중 잣대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다루려 하고 있다”며 “이는 정치적 음모이며, 우리는 이 결의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힘.
- **北, ‘평화숲 주장’ 조너선 리에 격려편지(11/19, 연합뉴스)**
- 북한이 판문점에 평화숲을 조성하자는 주장을 펴는 미국인 어린이 환경운동가 조너선 리(12)군에게 격려성 편지를 보냄.
 - 중국을 방문 중인 리군 측은 최근 북한 외무성으로부터 자신의 활동을 격려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받았다고 이날 밝힘.
 - 북한 외무성은 이메일에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조너선 리 소년의 꿈과 그 활동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특히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 공고한 평화를 실현하려는 노력에 대해 우리는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밝힘.
 - 이어 “최근의 남북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악화돼 있었지만 앞으로 남북관계를 비롯한 정세가 개선된다면 조너선이 희망하는 평화 사업에도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이번에 제기한 문제들은 그때 순조롭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임.



- **北외무성, “유엔 인권결의안 전면 배격”(11/20,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0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북 인권 결의안을 ‘전면 배격’한다고 밝힘.
 - 이 대변인은 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대북 인권) 결의는 적대세력들의 정치적 모략 책동의 산물”이라면서 ““인권 유린국’의 감투를 씌워 압력과 음모의 방법으로 우리 제도를 허물어보려는 것”이라고 말함.
 - 이어 “우리는 언제나와 같이 이번 결의도 단호히 전면배격한다”면서 “우리는 인권이 가장 철저하게 보호되고 전면 증진될 수 있는 제도인 우리식 사회주의제도를 계속 강화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임.

■ 기타 (대외 일반)

- 美의 對北제재 강화는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의 불집을 터트리기 위한 계획적 도발”이라며 “제국주의자들의 제재 책동에 대한 부당성과 경각심” 고취(11/15, 중통·노동신문)
- 駐北 브라질 대사, ‘공화국 선포의 날’ 즈음 대동강외교단 회관에서 연회 마련(11/15, 중통)
- 北, 日本의 민심은 과거청산을 요구하고 있으나 당국은 朝日 평양선언의 기본정신에 어긋나게 ‘핵문제’, ‘납치문제’의 先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난(11/17, 중통·노동신문·평방)
- 韓·美 합동군사연습, 중앙아시아 군사원조, 임계전 핵시험 등 “美國이 정치군사적 위기의 출로를 침략과 전쟁책동 강화에서 찾고 있다”며 “세계제패 야망에 대처한 反戰평화투쟁” 선동(11/18, 중통·노동신문)
- 美 핵미사일의 발사통제센터 통신연결 중단사고 거론 “핵전쟁준비에 광분하는 한 핵무기 관련 사고는 근절될 수 없다”고 비난(11/18, 노동신문)

나. 6자회담(북핵)

- **北풍계리에서 핵실험 준비 가능성(11/17, 산케이신문)**
 - 신문은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3번째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영국의 군사정보회사인 IHS 제인스의 위성사진 분석을 인용해 보도
 - 이 신문은 제인스가 북한이 작년 5월 2번째 핵실험을 실시한 풍계리 주변 시설에서 터널을 굴착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주는 위성사진을 16일 발표했다고 전함.
 - 이 신문에 따르면 제인스의 전문가가 미국 디지털글로브사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16일에 지하 핵 실험장 주변에서 차량의 이동과 시설의 변화 등을 보여주는 모습을 확인했고, 갱도를 파면서 나온 토석류가 폭 12m에 걸쳐 쌓여있는 것도 확인했다고 전함.



- 北신문, “6자회담 중단은 한·미 양측 책임”(11/17, 노동신문)

 - 신문은 이날 ‘대화 웨방꾼들의 희떠운 소리’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우리는 6자회담 재개에 준비돼 있지만 6자회담이 열리지 못하는 것은 미국과 남조선 때문”이라면서 “남조선 당국자들은 미국과 함께 ‘천안호’ 사건이 해결되기 전에는 6자회담을 열 수 없다면서 회담 재개의 앞길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졌다”고 주장
 - 또 신문은 “우리는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실현시키는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대결과 압박으로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는데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北, “경수로 건설은 경제주권”(11/18, 조선신보)

 - 신보는 이날, 북한이 평안북도 영변에 건설 중인 것으로 전해진 경수로와 관련해 “미국 오바마 정권의 ‘기다리는 전략’의 목적 중 하나가 제재압박에 의한 경제 질식에 있다고 보는 조선(북한)이 ‘주체 경수로 건설’로 나가는 것은 시비질할 수 없는 신성한 경제주권”이라고 주장
 - 이 신문은 ‘협상 중단상태와 주체 경수로 건설’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최근 조선을 방문한 미국 인사들이 영변지구에 ‘실험용 경수로’가 건설되고 있다고 언론에 전한 것과 관련, 미국과 남조선 당국자들은 조선의 ‘약속위반’을 운운하고, 언론은 ‘핵무기개발’과 억지로 결부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힘.
 - 이달 2~6일 북한을 방문한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16일 워싱턴의 한국 특파원들에게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영변 지역에 100MW 규모의 실험용 경수로 건설을 추진 중이라는 말을 북한 관리들한테 들었다”고 말함.
 - 신보는 이어 “조선은 6자회담이 파탄된 조건(상황)에서 ‘자위적 핵억제력 강화’와 ‘우라늄 농축기술에 기초한 경수로발전소 건설’이라는 ‘두 가지 통로’의 계획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전자가 6자회담 합의에 따라 동결됐던 활동을 재개한 것이라면, 후자는 새로 착수한 계획인데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핵심적인 문제를 푸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변
 - 신문은 또 “자체 핵연료로 돌아가는 경수로발전소가 건설되면 경수로 제공을 ‘대가’로 조선의 행동을 이끌어 내는 거래방식은 더 이상 성립될 수 없다”면서 “이는 조선에 대한 미국의 ‘경제지레대’(경제지렛대)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해, 협상지연술에 매달리는 오바마정권은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말함.

- 北, 美전문가에 원심분리기 수백개 공개(11/21, 연합뉴스)

 - 북한은 지난주 북한을 방문한 미국의 핵 전문가 지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에게 원심분리기 수백개를 갖



춘 대규모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여준 것으로 드러남.

- 이 우라늄 농축시설은 이제 막 건설된 것으로 보였으며 첨단 장비를 통해 통제되고 있었다고 헤커 교수는 전함.
- 헤커 교수는 20일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영변에서 수백개의 정교한 원심분리기가 설치돼 있는 것을 목격하고 깜짝 놀랐다고 밝혔으며 이 원심분리기가 ‘초 현대식 제어실’을 통해 통제되고 있었다고 덧붙임.

3. 대남정세

● 北, “금강산관광과 남북문제는 불가분의 관계”(11/15, 노동신문; 평양방송)

- 노동신문은 ‘관광재개는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 과제’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관광사업과 북남관계 문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관광사업에 대한 태도는 곧 북남관계에 대한 태도”라면서 “관광사업을 가로막는 것은 민족의 화해와 협력에 대한 부정이자, 북남관계 개선에 대한 부정”이라고 밝힘.
- 신문은 이어 “현재의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면 금강산관광 같은 협력 교류 사업들이 재개돼야 한다”면서 “남조선 당국은 민족적 단합을 도모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관광재개와 관련한 회담에 하루빨리 응해야 한다”고 덧붙임.
- 라디오 평양방송도 이날 논평에서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입장과 태도는 북남관계 개선을 바라는가, 바라지 않는가를 가르는 시금석”이라며 “(남한) 보수당국은 우리가 제의한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며 노동신문과 똑같은 주장을 함.

● 北, “적십자회담 때 금강산관광 협의하자”(11/18, 연합뉴스)

- 북측이 오는 25일 열릴 예정인 남북적십자회담에서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한 협의를 하자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통일부가 밝힘.
- 금강산관광 실무를 총괄하는 북측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이날 개성공단관리위를 통해 보내온 통지문에서 적십자회담 때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자들이 함께 나올 것을 요구
- 북측은 적십자회담과 함께 열릴 금강산관광 관련 회담에서 금강산 지구 내 남측 부동산의 몰수·동결 해제 문제도 같이 협의해 해결하자고 덧붙임.
- 이는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논의를 위한 북측의 당국 간 회담 요구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전날 “회담을 하려면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에 대한 동결·물수 조치부터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북 통지문을 보낸 데 대한 답변

- 북측은 25일 적십자회담 개최에는 합의했지만 회담 장소로 남측의 도라산 출입사무소 제안에 대해서는 이날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오지 않은 상태임.

● 北조평통, 李대통령 대북발언 비난(11/18, 조선중앙통신)

- 통신에 따르면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남북관계와 정상회담 등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대북 발언을 싸잡아 비난하고 나섬.
- 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답화를 통해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천안함 사태에 대해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실질적 남북관계 발전의 출발점이 된다’고 한 것과 지난 14일 발행된 일본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언제라도 정상회담이 가능하다’고 밝힌 사실을 거론하며 이는 “우리(북)의 성의있는 노력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우롱이며 도발”이라고 비난했다고 통신이 전함.
- 이어 대변인은 또 현인택 통일부장관이 1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은 북핵문제와 천안함 피격 사건 등 남북관계의 본질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북남관계 개선과 평화를 바라는 온 겨레와 내외 여론에 찬물을 끼얹는 도전행위”라고 주장
- 대변인은 “남조선 당국자들의 망발은 우리와 끝까지 대결하려는 불순한 속심(속셈)을 다시금 드러낸 것으로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우리(북)는 남조선 당국자들의 태도를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 北, “마주앉는 것이 급선무”…연일 금강산협상 요구(11/19, 우리민족끼리)

- 매체는 이날 “꼬인 북남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쌍방이 대화탁(테이블)에 마주앉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북남 관계의 파국 상태가 지속되면 남조선 당국에도 이로울 것이 없다”고 밝힘.
- 이 매체는 이어 “북남 대화에 전제조건을 내들어서는(내세워서)는) 절대로 안 된다”면서 “북남 관계의 개선 여부는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입장과 태도에 달려 있다”고 주장

■ 기타 (대남)

- ‘韓·美 FTA 재협상’(美産 자동차 수입규제 완화) 관련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외세에 팔아먹는 굴욕행위”라고 비난하며 南 집권세력의 “親美사대정책 철회” 촉구(11/15, 중통·노동신문)



- “통일부의 방해책동으로 ‘거리말큰사전 편찬사업’이 애로를 겪고 있다”며 “남북협력기금을 북남협력 교류사업의 활성화가 아닌 체제대결소동에 써먹고 있다”고 비난(11.15, 평방)
- 北 「조평통」서기국 보도 제967호, 11/16 서울지방경찰청의 “『한총련』前 간부 간첩혐의 발표” 관련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남북화해와 자주통일의 기운을 가로막고 민족대결을 고취하려는 반통일적 범죄행위”로 비난 (11/16, 중통·평방)
- 北, 서해상 ‘韓美합동군사연습’ 진행 관련 “또다시 한반도에서 군사적 대결과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핵전쟁 국면으로 이끌어 가려는 계획적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강변(11/16, 민주조선)
- 北, 우리 정부의 ‘PSI 전문가그룹(OEG)’ 가입 관련 “엄중한 반민족적 도발행위이며,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온 겨레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라고 持續 비난(11/16, 노동신문)
- 南 國防部の 北 국방총검열단의 천안함피격사건 진상공개장(1) 발표에 대한 반응(남한에서 제기된 의혹들 반복 등) 관련 “우리(北)와 역지로 연결시키기 위한 가소로운 생떼질”이라고 강변(11/17, 평방)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보즈워스 “대북협상 다음단계 논의위해 순방”(11/21)

- 북핵 6자회담 등 현안 협의를 위해 방한한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1일 이번 한·중·일 순방에 대해 “관련국과 대북협상의 다음단계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 이날 오후9시15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보즈워스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에 돌아와서 기쁘다”면서 “한국 당국자들과 만남 뒤 내일 더 길게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즈워스 대표의 이번 방한에는 엘리엇 강 미 국무부 비확산 부차관보가 동행했다.
- 보즈워스 대표는 22일 오전 6자회담의 한국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조찬을 함께 하며 영변 핵시설 등 최근 북한의 움직임을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 中언론, ‘北원심분리기 공개’ 소극 보도(11/21)

- 북한이 미국의 핵 전문가 지그프리드 헤커 교수에게 우라늄 원심분리기 공개했다는 보도가 나와 파장이 이는 가운데 북한의 핵개발을 민감하게 여겨온 중국의 주요 매체들은 대체로 소극적인 보도 태도를 보였다.
- 세계 주요 언론들이 이날 뉴욕타임스(NYT)를 긴급 인용해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가 가져올 파장에 예의주시했지만 중국의 대부분 관영·민영 매체들은 이날 오후 7시까지(한국 시각) 관련 기사를 거의 다루지 않았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제 문제 전문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 인터넷판만이 거의 유일하게 사실을 중심으로 북한의 원심분리기 공개 소식을 간략하게 전했다.
- 환구시보는 NYT와 연합뉴스 등 외신을 인용해 북한이 헤커 교수에게 2천개의 원심분리기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런 가운데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한국, 일본, 중국을 긴급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환구시보는 보즈워스 대표가 세 나라를 방문해 각국 관계자들과 북한의 우라늄 원심분리기와 경수로와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고 공통 대응 방안 마련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했다.



● <정부, ‘北 원심분리기 공개’에 대응 분주>(11/21)

- 정부는 21일 북한이 최근 지그프리드 헤커 미국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에게 원심분리기 수백개를 갖춘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여줬다는 보도와 관련해 북한의 의도를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음.
- 한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비롯한 외교부 북핵담당 당국자들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 나와 대책회의를 가졌음. 정부는 북한이 실제로 원심분리기를 수백개나 가동하고 있다는 보도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만약 사실일 경우 한반도에 새로운 북핵위기가 조성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함.
-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만약 북한이 우라늄농축 작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확인된다면 당연히 심각한 상황이 된다.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우라늄농축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두개의 루트 중 하나로서 그동안 많은 우려와 의구심이 제기됐다”고 말했음.
- 외교부도 우라늄농축에 관한 언론에 배포한 공지자료에서 “만약 우라늄농축에 대한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라면서 “북한은 6자회담 관련국들 및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해 추가적인 상황악화를 자제하고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음.
- 정부는 미국, 일본 등과 북한의 우라늄농축 개발수준 및 기술력을 협의하는 한편,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우라늄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가 대규모로 북한에 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 이와 함께 정부는 미국, 중국, 일본 등 6자회담 참가국들과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속도를 내는 모습임.
-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22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방한하는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북핵 문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위 본부장도 이날 아침 서울의 한 호텔에서 보즈워스 대표와 조찬회동을 갖는데 이어 오후에는 1박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6자회담 재개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임.

● <美, ‘北 우라늄농축시설 공개’ 대응 분주>(11/21)

- 북한이 고농축우라늄(HEU)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원심분리기를 방북한 미국 전문가에게 공개한 사실을 파악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촉각을 세우면서 북한의 공개 의도 분석 및 대응 방안 모색에 분주히 움직였음.
- 미국은 일단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가 지금까지보다 한 단계 더 나간 북한의 새로운 카드로 받아들이며, 이번 상황을 엄중히 다루는 모습임. 이에 따라 한국, 일본, 중국 등 3국과의 대응방안 협의를 위해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대표단을 20일 긴급히 출발시켰음.

- 보즈워스 대표는 당초 22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반도 관련 세미나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북한이 지그프리드 헤커 스펀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에게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는 수백개의 원심분리기가 설치된 새로운 대규모 시설을 공개한 것으로 전해지자 일정을 전격 취소하고 급거 아시아 방문길에 올랐음.
- 일단 미국 내에서는 그동안 북한이 꼭꼭 감추어 두었던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한 것에는 다목적 의도가 담겨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우선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새로운 협상 카드로 농축 우라늄 카드를 본격적으로 만지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음.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카드라는 것임. 미 정부 고위관계자는 “시설의 운영 중단, 또는 해체에 대해 미국이 보상할 것인지를 보려 하는 것은 북한의 전형적인 전술”이라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음.
- 하지만 천안함 사건이 김정은의 신뢰구축을 위해 북한이 일으켰다는 분석이 있듯이 이번 건도 북한의 후계구도 구축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있음. 나아가 북한이 플루토늄 핵무기와 다른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임으로써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으려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음. 또 북한이 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해 궁극적으로는 플루토늄 핵무기보다 훨씬 위력이 센 수소폭탄을 만들려는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음.
- 일단 미국은 한·중·일·러 등 북핵 6자회담 나머지 5개국과의 공동 대응에 주력할 것으로 보임. 특히 북한이 플루토늄 외에 고농축 우라늄을 통한 새로운 핵무기 개발에 나서고 있음이 확인된 만큼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반대하고 있는 중국을 좀 더 설득, 북한에 대한 압박 강화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음.
- 물론 북한은 우라늄 농축을 영변에 짓고 있는 경수로의 연료용이라는 입장을 취하면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전선을 흐트러 놓으려 할 것으로 보임. 미국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로 대화로 당장 입장을 전환할 가능성은 낮음. 미 정부 관계자들도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과거의 합의를 준수하겠다는 구체적인 행동과 진지한 행동을 보여주지 않을 경우 북한과의 재협상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고 NYT는 전했다.
-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도 장기적인 대북대화 부재에 대한 우려가 그동안 있어 왔다는 점에서, 서서히 대화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북한의 핵 추가개발은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해 온 ‘핵없는 세상’에 대한 도전이기도 함.
- 북한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강경한 대응카드도 마땅하지 않음. 이미 상당 수준의 대북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를 당장 하기는 쉽지 않음.



- 한편 헤커 박사가 이번 방북길에 우리나라 농축 시설에 대한 사진을 찍거나, 북한이 이미 생산했다고 하는 저농축 우라늄에 대한 검증은 허락받지 못했다고 NYT는 전했다. 이와 관련, 미국의 핵군축 싱크탱크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은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개발이 실험실 단계를 넘어 우라늄을 농축하기 위해 시범적인 공장을 건설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했다는 분석을 최근 제기한 바 있음.
- 미 행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번에 발견한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갖고 있던 우려와 일치한다”면서 “북한은 이런 능력을 수중에 갖고 있었으며, 아마도 다른 시설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시설 외에 원심분리기 등이 설치된 다른 우라늄 농축 시설도 보유중일 가능성을 시사했음.

● “北, 美전문가에 원심분리기 수백개 공개”(11/21)

- 북한은 지난주 북한을 방문한 미국의 핵 전문가 지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에게 원심분리기 수백개를 갖춘 대규모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여준 것으로 드러났음. 이 우라늄 농축 시설은 이제 막 건설된 것으로 보였으며 첨단 장비를 통해 통제되고 있었다고 헤커 교수는 전했다.
- 헤커 교수는 20일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영변에서 수백개의 정교한 원심분리기가 설치돼 있는 것을 목격하고 깜짝 놀랐다고 밝혔다. 헤커 교수는 또 이 원심분리기가 ‘초 현대식 제어실’을 통해 통제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헤커 교수는 북한을 떠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며칠 전 백악관에 북한에서 본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음.
- 북한은 헤커 교수에게 원심분리기 2천개가 이미 설치돼 가동중이라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국을 포함한 국제기구 조사관들이 북한을 마지막 방문했던 지난해 4월까지만 해도 이런 대규모 핵 시설은 없었기 때문에 북한은 이후 급히 시설을 건설한 것으로 추정됨. 또 속도로 봤을 때 북한은 핵실험 이후 가해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피해 외부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NYT는 평가했음.
- 헤커 박사는 북한 방문 직후인 지난 13일 베이징에서 외신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평안북도 영변에 경수로 1기를 건설중이라고 밝힌 바 있음. 당시 헤커 박사는 경수로 발전용량이 25~30MW(메가와트)라면서 북한이 이제 막 건설을 시작했기 때문에 완공까지는 몇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국의 한 싱크탱크도 9월말 영변 핵시설 주변을 찍은 위성사진을 공개해 북한이 경수로 건설을 하고 있음을 알린 바 있음.
- 북한이 이처럼 민간인을 통해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면서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에는 새로운 도전이 될 것으로 보임. 북한의 이 같



은 의도적인 핵 시설 공개는 협상을 위한 전략일 수도 있고 혹은 후계 체제 구축기를 맞아 핵개발 계획을 강행하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런 움직임은 국내외에서 핵 확산을 방지하려는 오바마 정부에게는 탐탁지 않은 일일 수 밖에 없음.

- 미 정부도 이 일이 벌어지자 동맹국과 의회에 급히 브리핑을 하는 등 국제사회의 반향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시작했다. 중국과 일본, 러시아, 한국 등 6자회담 당사국들에게도 정부 관리를 파견했음.
- 백악관은 우선 북한이 이번 일을 통해 유엔의 제재를 어기고 핵개발 프로그램을 강행하려 하고 있음을 스스로 입증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음. 미 정부는 이번에도 중국을 설득하는데 기대를 걸고 있음. 북한의 가장 큰 정치적, 경제적 지원자인 중국이 북한의 후계자 공개 후 더욱 더 군국주의 성향을 보이고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압력을 가해주기를 바라고 있음.

● 보즈워스, 한·중·일 긴급 방문(11/21)

-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20일 한국, 중국, 일본 방문길에 나섰다고 미 국무부가 발표했다.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보즈워스 대표가 이끄는 범부처 방문단이 한·중·일 3국과 북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아시아 방문길에 올랐다고 밝혔다.
- 보즈워스 대표 일행은 이날 오전 미국을 떠났으며, 일요일인 21일 서울에 도착해 한국 당국자들과 협의를 가진 뒤 22일 일본 도쿄, 23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뒤 24일 귀국할 예정임. 보즈워스 대표의 아시아 방문 일정은 긴급히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 이번 방문은 뉴욕타임스(NYT)가 이날 인터넷판에서 북한이 최근 방북한 지그프리드 헤커 스펜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에게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는 수백개의 원심분리기가 설치된 새로운 대규모 시설을 공개했다고 보도한 가운데 이뤄진 것임.
- 이에 따라 보즈워스 대표의 방문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 및 영변에 건설중인 것으로 알려진 경수로 문제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北 ‘두 가지 통로’ 공식화..핵위협 노골화>(11/19)

- 6자회담 재개를 둘러싼 북한과 한·미·일의 기싸움이 심상찮은 흐름임. 북한은 대화국면 조성을 겨냥한 압박용으로 핵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고, 이에 한·미·일은 북한의 선(先) 비핵화를 전제조건화하며 역으로 압박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그야말로 ‘강 대(對) 강’의 대치구도임.
- 북한이 최근 ‘두가지 통로’ 전략을 꺼내들어 핵위협 카드를 노골화하고 있는 점이 우선 주목됨. 두가지 통로는 ▲플루토늄 무기화를 통한 자위적 핵억제력 강화 ▲우라늄 농축 기술에 기초한 경수로발전소 건설을 의미함. 북한의 입장을 비공식 대변하는 ‘조선신보’가 18일



- 이를 보도했음.
- 북한이 거론한 ‘플루토늄 통로’와 ‘우라늄 통로’는 이미 지난해 9월 북한이 공식화한 사항임. 북한은 유엔주재 북한 상임대표 명의의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폐연료봉의 재처리가 마감단계에서 마무리되고 추출된 플루토늄이 무기화되고 있다”며 “우라늄 농축시험도 성공적으로 진행돼 결속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힌 바 있음.
 - 외교가가 신경을 곤두세우는 대목은 이 같은 움직임이 단순 엄포를 넘어 다목적 포석을 노린 ‘실체적 위협’으로 진전될 가능성임. 외교 소식통은 19일 “현재로서는 몸값 높이기 차원의 협상용으로 보이지만 북한으로서는 여러가지 포석 하에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특히 ‘우라늄 통로’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과 연관돼 주목되고 있음. 영변 핵단지에 건설 중인 실험용 경수로가 핵의 평화적 이용을 명분으로 우라늄 농축활동을 하려는 목적을 띠고 있다는 분석임. 일각에서는 이 경수로가 사용후 연료봉을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추출해내는 ‘핵연료 연소장치’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됨.
 - 외교가에서는 북한의 이 같은 ‘두 통로’ 전략이 상황에 따라서는 극단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 나옴. 북한으로서는 미국으로부터 원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을 경우 3차 핵실험이라는 초강수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임. 특히 일부 외신에서는 북한이 두차례 핵실험을 강행한 함북 길주군 풍계리에서 새로운 개도를 만들며 핵실험 ‘준비단계’에 돌입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음.
 - 조선신보는 “미국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끝내 방해하고 조선에 압박을 가하는 길을 택한다면 ‘두 통로’의 다른 한쪽인 핵억제력강화 노선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조선을 떠밀수 있다”고 주장했다.
 - 이에 맞서 한·미·일은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에 일정정도 긴장도를 느끼면서도 ‘전략적 인내’ 기조를 고수하며 대북 공조전선을 오히려 강화하는 흐름임. 전날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일본측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타카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의 회동은 ‘선(先) 비핵화 조치-후(後) 6자회담 재개’의 기조를 확인한 자리였음.
 - 특히 한·일 양국은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북한이 취해야할 비핵화 조치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핵시설 모라토리엄 선언과 같은 비핵화의 상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음. 이는 앞으로 우리 정부가 주도하는 5자간 연쇄 협의절차로 이어지며 대북 공동제안의 틀을 형성해낼 것으로 예상됨.
 -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19일 북한 경수로 건설 움직임에 대해 “북한이 우선 해야 할 일이 있으며,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왔다”고 지적했고,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준비설에 대해서는 “매우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런 가운데 주목할 변수는 중국이 어떤 역할을 취할 지임.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이 오는 26~27일 공식 방한할 예정이어서 한·미·일 대북공조를 주도하고 있는 우리 정부와의 조율이 예상됨. 갈수록 핵 위협 카드를 노골화하는 북한과 역으로 대북 압박공조를 강화하는 한·미·일의 대립각이 커지면서 연말 한반도 정세 유동성이 높아지는 흐름임.

● 美 “北 면밀 주시중..추가도발 말아야”(11/19)

- 미국은 18일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준비설과 관련, 북한에 대해 추가적 도발을 하지 말라고 촉구했음. 제프 모렐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 준비설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구체적인 확인은 하지 않은 채 “우리는 북한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진정한 북한의 의도를 해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모렐 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그 같은 행동들을 추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미국의 분명한 우려가 될 것이라면서 “어떤 추가적인 도발이나 안정을 해치는 행동도 하지 말 것을 북한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보다는 이웃 국가, 특히 한국과 건설적으로 접촉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속적이고 검증가능하게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룬다는 우리의 목표를 외교적으로 달성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 준비설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구체적인 언급은 정보사항이라며 밝히지 않은 채 북한에 대해 9.19 공동성명 준수를 촉구했음. 그는 “우리는 북한이 유엔 대북결의 1718호와 1874호를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는 2005년의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조치들을 취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북한과의 접촉 계획을 묻는 질문에 “지금으로서는 아는 것이 없다”면서 “북한은 무엇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알고 있으며,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나오는 긍정적인 신호들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긍정적인 신호가 아직 없느냐는 질문에 “두어개의 이벤트를 봤지만, 우리는 좀 더 폭넓은 추세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 위성락 “6자회담 서둘러지 않고 여건 준비할 것”(11/18)

- 한국과 일본이 6자회담을 서두르지 않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 등 ‘바른 여건’을 준비한다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한국측 회담대표가 18일 밝혔다.
- 한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8일 오후 2시께 일본 외무성에서 일본측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타카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을 만나 6자회담 재개 문제를 논의했음.

- 위 본부장은 회담후 기자들에게 “(일본측과) 북한 핵문제에 대해 전반적인 얘기를 나눴다. 현안을 평가했고, 어떻게 움직이는 게 좋을지 대응책을 논의했다”며 “한국과 일본은 6자회담을 서두르지 않고 바른 여건을 준비한다는데 의견이 완전히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바른 여건’이라는 부분을 영어로 ‘right condition’이라고 표현했음.
- 위 본부장은 또 북한의 경수로 건설 움직임이나 3차 핵실험 준비설에 대해 “그런 얘기도 논의를 하긴 했지만 현재 밝혀진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서로 알고 있는 것을 교환하는 정도에 그쳤다”며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회담 재개를 위해) 좋은 정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음.
- 이날 회담은 2시간 가량 이어졌고, 양국 외교 관계자들이 3~4명씩 배석했음.

● 조선신보 “北경수로 건설은 경제주권”(11/18)

-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총련(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8일, 북한이 평안북도 영변에 건설 중인 것으로 전해진 경수로와 관련해 “미국 오바마 정권의 ‘기다리는 전략’의 목적 중 하나가 제재압박에 의한 경제질식에 있다고 보는 조선(북한)이 ‘주체 경수로’ 건설로 나가는 것은 시비질할 수 없는 신성한 경제주권”이라고 주장했다.
- 이 신문은 ‘협상 중단상태와 주체 경수로 건설’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최근 조선을 방문한 미국 인사들이 영변지구에 ‘실험용 경수로’가 건설되고 있다고 언론에 전한 것과 관련, 미국과 남조선 당국자들은 조선의 ‘약속위반’을 운운하고, 언론은 ‘핵무기개발’과 억지로 결부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음.
- 이달 2~6일 북한을 방문한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16일 워싱턴의 한국 특파원들에게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영변 지역에 100MW 규모의 실험용 경수로 건설을 추진 중이라는 말을 북한 관리들한테 들었다”고 말했음.
- 조선신보는 이어 “조선은 6자회담이 파탄된 조건(상황)에서 ‘자위적 핵억제력 강화’와 ‘우리농 농축기술에 기초한 경수로발전소 건설’이라는 ‘두 가지 통로’의 계획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전자가 6자회담 합의에 따라 동결됐던 활동을 재개한 것이라면, 후자는 새로 착수한 계획인데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핵심적인 문제를 푸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변했음.
- 신문은 또 “자체 핵연료로 돌아가는 경수로발전소가 건설되면 경수로 제공을 ‘대가’로 조선의 행동을 이끌어 내는 거래방식은 더 이상 성립될 수 없다”면서 “이는 조선에 대한 미국의 ‘경제지레대’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해, 협상지연술에 매달리는 오바마정권은 함정에 빠



- 협용 경수로를 건설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밝힌 바 있음.
- 또 정부는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3번째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본 산케이신문 보도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음.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확인된 바 없다”면서도 “풍계리 일대를 포함해 항상 북한 핵시설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해 오고 있으며 관련국들과도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 다른 당국자는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다”며 “풍계리에서 사람 이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움직임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6자회담의 우리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8일 일본을 방문해 일본측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을 면담해 북한의 핵 상황을 평가하고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정부는 북한의 핵관련 움직임이 한국, 미국 등이 6자회담을 재개하도록 압박하려는 시위용이라는데 무게를 두면서 미국, 일본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등 북한에 요구할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 “北 새 경수로, 신포경수로 ‘원용’ 가능성”(11/17)

- 북한이 영변지역에 새로운 실험용 경수로를 건설하면서 지난 2003년 중단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함경남도 금호지구 신포 경수로의 기초적인 건설공정을 역으로 활용하는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을 동원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 북한 경수로 문제에 정통한 복수의 외교소식통은 “현재로서는 북한이 짓고 있는 경수로 공사의 실체를 정확히 확인할 길이 없다”며 “하지만 북한의 기술수준이나 정황으로 볼 때 신포 경수로의 공정기법을 역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꽤 있다”고 말했다.
- 소식통은 그러나 “신포 경수로는 기초공사 단계에서 마무리됐기 때문에 미국이 보유한 핵심기술이나 부품이 들어가있지 않다”며 “현재로서는 북한이 경수로 건설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2003년 11월 35% 수준의 기초공정을 마친 신포 경수로는 현재 증장비와 자재의 상당수가 빼돌려져 원형이 유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 소식통은 “신포 경수로의 일부 증장비나 원자재가 사용됐을 것이란 관측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근 방북한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16일 워싱턴D.C.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북한은 오는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영변 지역에 100MW(메가와트) 규모의 실험용 경수로 건설을 추진 중”이라며 “이는 신포경수로의 10분의 1 규모”라고 밝혔다.



● 北신문 “6자회담 중단은 한미 양측 책임”(11/17)

- 지난 G20 정상회의 때 한미 양국 정상이 6자회담 재개의 조건으로 북한의 ‘책임있는 태도와 진정성’을 요구한 것에 대해 북한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음.
- 17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노동당기관지 노동신문은 ‘대화 휘방꾼들의 희떠운 소리’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우리는 6자회담 재개에 준비돼 있지만 6자회담이 열리지 못하는 것은 미국과 남조선 때문”이라면서 “남조선 당국자들은 미국과 함께 ‘천안호’ 사건이 해결되기 전에는 6자회담을 열 수 없다면서 회담 재개의 앞길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졌다”고 주장했다.
- 신문은 또 “우리는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실현시키는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대결과 압박으로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는데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에 대해 북한이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남북관계 발전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오바마 대통령도 “적절한 시기에 북핵 6자회담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의견일치를 봤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 “北 풍계리에서 핵실험 준비 가능성”(11/17)

-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3번째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영국의 군사정보회사인 IHS 제인스의 위성사진 분석을 인용해 17일 보도했음. 이 신문은 제인스가 북한이 작년 5월 2번째 핵실험을 실시한 풍계리 주변 시설에서 터널을 굴착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주는 위성사진을 16일 발표했다.
- 이 신문에 따르면 제인스의 전문가가 미국 디지털글로브사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16일에 지하 핵실험장 주변에서 차량의 이동과 시설의 변화 등을 보여주는 모습을 확인했고, 갱도를 파면서 나온 토석류가 폭 12m에 걸쳐 쌓여있는 것도 확인했음. 또 지난달 27일에는 핵실험장의 남쪽 150m 지점에 새롭게 굴착한 토석류가 3천m³ 쌓여있는 것이 확인됐고, 핵실험장 북쪽 180m 지점의 2개소에서 지면을 굴착한 흔적이 보였음. 이는 핵실험장에 전력선을 끌어들이고 갱도를 건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 이 신문은 작년 5월 핵실험 전에도 같은 상황이 전개됐었다면서 17년에 걸친 동영상 분석 경험을 가진 제인스의 전문가는 “북한이 지하 핵실험장에 갱도를 굴착하는 등 새로운 실험을 준비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명확하다. 현장의 상황만으로 판단할 때 향후 반년 이내에 뭔가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음.



● **美 “北, 비핵화 의무 준수해야” (11/16)**

- 미국은 15일 북한의 경수로 건설 움직임과 관련한 외신 보도에 대해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정레브리핑에서 “북한은 2005년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약속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그는 “우리는 장기적 차원에서 (북한이) 필요한 것에 대해 북한과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지만, 북한이 약속들을 준수하는 것이 먼저이며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외교부 “北 경수로 움직임, 국제사회 기대 어긋나”(11/15)**

- 외교통상부 김영선 대변인은 15일 정레브리핑에서 최근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경수로를 건설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만약 경수로 개발 움직임이 있다면 최근 6자회담 관련국이나 국제사회의 기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 김 대변인은 이어 “북한은 9.19 공동성명에서 모든 핵무기와 핵관련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이루고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약속과 국제적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김 대변인은 또 “북한이 자체 경수로를 개발하겠다고 작년에도 이미 여러차례 걸쳐서 공언한 바 있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구체적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북한이 경수로 건설과 관련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지 확인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그는 “다만 관련동향은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고 관련국들과도 정보교류를 하면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 미·북 관계

● **美, 北대성은행 등 2곳 제재대상 추가(11/19)**

- 미국 재무부는 18일 북한 ‘노동당 39호실’이 소유하고 있거나 통제하고 있는 북한의 조선대성은행과 조선대성무역총회사 등 2곳을 제재대상 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두 기관을 제재대상 리스트에 추가하면서 이들 기관의 주소와 사용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자세히 공개했다.
- 이 날 제재대상에 추가된 조선대성은행은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의 자금관리처인 ‘노동당 39호실’이 소유하고 있는 대외결제은행이며, 대성무역총회사는 39호실의 불법거래에 이용된 위장회사로 알려졌다.
-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이들 두 기관을 제재대상 리스트에 추가하면서 이들 기관의 주소와 사용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자세히 공개했다. 재무부는 “조선대성은행은 북한의 불법적 금융



- 프로젝트에 개입했으며, 조선대성무역총회사는 39호실을 대신해 대외거래를 하는데 이용됐다”고 밝혔다.
- 재무부는 노동당 39호실이 불법적 경제활동 관여와 비자금 관리, 지도부를 위한 수익 창출 등을 통해 북한 지도부에 핵심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비밀 기관이라고 전했다. 스튜어트 레비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은 성명을 통해 “조선대성은행과 조선대성무역총회사는 북한의 불법적이고 위험한 활동을 지원하는 39호실의 금융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라고 밝혔다.
 - 레비 차관은 “재무부는 북한의 확산 및 다른 불법적 활동에 개입된 금융네트워크 기관을 추적하고 활동을 막기 위해 계속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북한이 경수로 건설을 추진중이라는 사실이 공개되고, ‘핵 실험’을 실시했던 풍계리 등에서 의심스러운 활동이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임.
 - 이와 관련, 워싱턴 소식통은 “이번 조치는 8월 말 발표된 미국의 새 대북행정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라면서 이들 두 기관이 북한의 무기거래 등 불법행위에 연루돼 제재 대상에 올랐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오바마 정부는 북한 제재문제와 관련,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등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에 따라 2~3주 내에 추가로 제재 대상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 앞서 미국은 지난 8월말 북한 제재를 위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북한 노동당 39호실과 정찰총국, 청송연합 및 김영철 정찰총국장 등 기관 3곳과 개인 1명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었다. 북한 지도부의 자금관리처인 노동당 39호실과 인민무력부 정찰총국은 당군의 핵심기구로 슈퍼노트(100달러 위폐) 제작, 담배위조, 아편재배, 마약거래 등 불법활동의 산실 역할을 하며 북한 통치자금의 관리처로 지목된 곳임. 당시 미 행정부는 “수주일, 수개월 내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美 “北, 현재로는 테러지원국 기준 벗어나”(11/18)

- 미국 정부는 17일 북한이 현재로서는 테러지원국 지정을 받을만한 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대니얼 벤저민 미 국무부 대테러담당 조 장관은 이날 워싱턴의 외신기자클럽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 그는 “지금 당장은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될 법정 기준 내에 들어있지 않다”면서 “북한이 2008년 10월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이후 국제 테러리즘을 반복적으로 지원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보를 우리는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국가가 반복적으로 국제 테러리즘을 지원한다고 국무장관이 결정해야 한다”면서 “이런 지정은 가능한 모든 증거들에 대해 매우 매우 신중하고 자세한 검토 뒤에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 또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조성렬 책임연구원은 “김정은 후계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정치, 경제, 사회적 안정은 물론 외교적으로도 평화적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면서 “미국 전문가들을 통해 6자회담을 빨리 재개하자는 입장을 미국 정부에 전달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음.
- 미국 전문가들의 방북이 집중된 시점도 그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의 중간선거(11.2), G20 정상회의(11.11~12) 같은 주요 정치·외교일정이 마무리돼, 북한으로서는 천안함사건 이후 극도로 경색된 남북관계와 대미관계에서 어떤 변화를 모색할 타이밍이 됐다는 얘기임.
- 조성렬 책임연구원은 “한미 양국의 중요 정치·외교일정이 일단락돼, 본격적으로 북핵 문제에 대한 고민이 시작될 수도 있다”면서 “북한이 미국의 민간전문가들을 잇따라 초청하는 것이 이런 시의성과 맞물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음.

● 北통신 “美 대북정책전문가 대표단 평양도착”(11/15)

- 지난해 2월 방북했던 모튼 아브라모위츠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15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음. 통신은 이날 “센츄리기금(재단) 상급연구사 모튼 아브라모위츠를 단장으로 하는 미국 대조선(대북)정책 전문가 대표단이 평양에 도착했다”고 짧막하게 전했다. 방북 일정이나 목적, 공항에서의 영접인사 등은 밝히지 않았음.
- 레이건 대통령 시절 국무부 정보조사 차관보를 지낸 아브라모위츠는 지난해 2월3~7일 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 미대사, 조너선 폴락 미국 해군대학 교수, 리언 시걸 동북아 안보협력 프로그램 국장 등 7명으로 구성된 미국의 민간대표단 자격으로 방북해 북한측 고위인사들과 만나 북핵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음.

다. 중·북 관계

● 中, 청진항-창장삼각주 해상운송 협약(11/16)

- 중국 투먼(圖們)시가 최근 창장(長江)삼각주에 위치한 저장(浙江)성 Ningbo(寧波)항과 북한 청진항-닝보 해상 항로 운항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연변일보(延邊日報)가 16일 보도했음. 신문은 이에 따라 투먼시가 곧 국가 해관총서에 이 해상 항로 승인 신청을 낼 계획이며 승인이 나는 대로 투먼이 부두 사용권을 확보한 청진에서 Ningbo를 잇는 해상 항로 운항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 이에 앞서 투먼시는 지난달 청진항에서 중국 남방을 오가는 해상 항로를 연내 개통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신문은 중국이 청진항 3, 4호 부두의 15년 사용권을 확보한 이후 3천만 위안을 들여 부두 보수작업에 나섰으며 청진항에서 화물 선적에 사용될 대형 크레인과 투먼-



북한 남양-청진 구간 화물 운송을 담당할 화물열차의 제작도 완료했다고 소개했음.

- 또 청진-닝보 해상 항로 운송을 맡을 양국의 해운업체도 확정되는 등 이 해상 항로의 조기 개통을 위한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해상 항로가 개통되면 훈춘(琿春) 등 두만강 유역에서 생산되는 석탄 등 지하자원과 곡물이 중국 동해 연안이나 남방으로 운송할 길이 열리게 됨. 투먼시는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투먼-청진-부산 간 육.해상 항로도 운항할 계획임.
- 중국 국가 해관총서는 지난 3월 청진항을 통한 동해 해상 항로 개통을 허용한 데 이어 지난 8월 이를 공식 발표했다. 연변일보는 “북한이 ‘청진항 종합 이용 프로젝트’를 ‘국가 방침 전략’으로 삼고 중국에 사용권을 준 청진항 3, 4호 부두를 ‘투먼 부두’로 명명하는 등 중국과의 협조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 中 6.25 참전 60주년 기념 서적 ‘붓물’(11/15)

- 중국군의 6.25전쟁 참전 60주년을 기념해 올해 중국에서 관련 서적이 잇달아 출간되고 있다고 조선족 인터넷 매체 조글로미디어가 15일 보도했음. 이 매체는 중국군의 ‘항미원조(抗美援朝) 전쟁’ 참전 60주년을 기념해 참전자들이나 역사가들이 저술한 관련 서적의 발간이 잇따르고 있으며 일부는 서점가에서 인기 코너에 배치될 만큼 많이 읽히고 있다고 전했다.
- 중국군사박물관 장팅위(姜廷玉) 연구원이 집필하고 해방군출판사가 발간한 ‘항미원조 전쟁 해설’은 중국군으로는 가장 먼저 6.25전쟁에 참전한 중국인민지원군 38군의 전투 상황을 130여 점의 관련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참전 유공자들의 명단도 수록했음.
- 중공당사출판사가 펴낸 군사전문가 쌍스(雙石)의 저서 ‘건국 후 첫 전쟁-항미원조 전쟁 전면 기록’은 상.하권으로 나눠 중국군의 6.25전쟁 참전 전 과정을 상세하게 다뤘음.
- 역사학자 류정이 저술, 인민출판사가 펴낸 ‘조선 1950’은 중국인민지원군이 참전했던 온정, 운산, 황초령, 덕천, 송골봉 전투를 40여만자의 방대한 분량으로 소개하고 있음.
- 해방군출판사가 출판한 ‘압록강에서 3.8선까지’는 참전국들의 역사 사료와 중국인민지원군 참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6.25전쟁의 배경과 전개 과정, 6.25전쟁 당시의 정치, 외교, 경제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음.
- 올해 들어 중국에서 6.25전쟁 관련 서적 출간이 활기를 띠는 것은 중국군 참전 60주년을 맞아 북한과 중국이 부쩍 ‘전통적 혈맹’ 관계를 강조하고 나선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임. 중국의 차기 최고지도자로 입지를 다지는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은 지난달 24일 6.25전쟁에 대해 “평화를 지키고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전쟁이었다”고 평가했음.



-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계자 김정은(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등 북한 최고 지도부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5일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중국의 6.25전쟁 참전 60주년 기념 군중대회에는 귀보송(郭伯雄)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 부주석과 군사대표단, 노병대표단 등 중국 대표단이 대거 참석, 양국 간 우의를 과시했음.

라. 일·북 관계

● “조선학교에 日교과서 참고 요구키로” <교도>(11/2)

- 일본 문부과학성이 조총련계 조선학교에 수업료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일본 고교의 정치·경제 교과서를 자율적으로 구입해서 참고하라’고 요청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2일 보도했음. 일본 여·야 양쪽에서 ‘조선학교가 반일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이런 요구의 근거로 삼고 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 문부성은 조만간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기준에 따라 조선학교도 수업료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는 결정을 내릴 예정임.
- 하지만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조선학교 교과서 중 ‘일본은 “납치문제”를 극대화해 반(反)공화국, 반(反)총련 운동을 벌였다’는 표현이나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을 ‘남조선의 날조’라고 기술한 부분, 한국전쟁은 북침이라는 주장 등을 고치라는 요구가 잇따르자 ‘일본 교과서 참고’라는 방법을 고안한 것으로 풀이됨.
- 즉 일본 문부성의 요구는 조선학교 학생들에게 일본 교과서를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참고하라는 요구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임. 자칫 이를 넘어서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기술한 일본 고교 교과서를 일본 국적이 없는 총련계 동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요구로 이어질 경우 “수업료 지원을 미끼로 일본의 논리를 강요한다”는 비난에 부닥칠 수도 있어 일본 정부가 수위 조절을 두고 고심할 것으로 예상됨.
- 한·일 외교 관계자들은 “국제사회 관례 상으로도 국적이 다른 이들에게 자국 교과서를 가르치라고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음.
- 일본 고교 교과서 중 상당수에는 독도(일본명 다케시마)를 일본땅이라고 적시하고 있고,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일본 고교 지리·역사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독도 영유권을 명시한 중학교 해설서에 기초해 심화학습을 하라고 교사들에게 요구했음.

마. 기 타

● 北외무성 “유엔 인권결의안 전면 배격”(11/20)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0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북 인권 결의안을 ‘전면 배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대북 인권) 결의



는 적대세력들의 정치적 모략 책동의 산물”이라면서 “인권 유린국”의 감투를 씌워 압력과 음모의 방법으로 우리 제도를 허물어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 대변인은 “우리는 언제나와 같이 이번 결의도 단호히 전면배격한다”면서 “우리는 인권이 가장 철저하게 보호되고 전면 증진될 수 있는 제도인 우리식 사회주의제도를 계속 강화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유엔 제3차, 대북 인권결의 채택..北 반발(11/19)

-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대북 인권결의안이 18일(현지시간)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고문과 비인간적인 구금 상태 등 북한의 인권유린을 비난하고 이 같은 상황의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대북인권결의안은 표결에 부쳐져 찬성 103, 반대 18, 기권 60표로 통과됐다. 이는 지난해 찬성 97, 반대 19, 기권 65표에 비해 찬성국이 6개국 더 많아진 것임. 우리 정부는 이번 대북 인권 결의안에도 공동제안국의 일원으로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음.
- 유럽연합(EU)과 일본이 공동 제출해 채택된 이 결의안은 내달 초 유엔총회 본회의로 넘겨져 표결에 부쳐질 예정임. 유엔은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대북 인권결의를 채택해왔으며, 이날 제3위원회에서 통과된 결의가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되면 6년 연속 인권결의를 채택하는 셈이 됨.
- EU 대표는 이날 제안 발언에서 “2005년 이후 북한 인권결의안이 계속 채택되고 있지만, 심각하고 조직화되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특히 올해는 북한 당국이 식량을 제대로 배분하지 않으면서 곡물 재배와 식량 거래마저 금지해 자연재해를 당한 북한 주민들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심각하게 걱정된다”고 우려했음.
- 결의안은 이어 “최근 북한이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보건기구(WHO) 및 유엔아동기금(UNICEF) 등 유엔 원조기구들과의 협력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과 같은 긍정적 진전이 일부 있다”고 평가했지만, “이는 매우 미미한 것이며 광범위한 인권 침해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음.
- 결의안은 또 과거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공개처형, 정치와 종교적 이유로 인한 사형, 표현의 자유 제한, 망명 신청자 및 난민 박해 등을 비난하는 내용도 담고 있음.
- 지난해 결의안과 비교할 때 올해 결의안에는 최근 이산가족 상봉을 평가하면서 “앞으로 더 큰 규모로, 정기적으로 이뤄지도록 남북간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는 내용과, 지난해 12월 제네바에서 채택된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를 북한이 거부한 것과 관련 “북한 정부가 인권이사회의 UPR 권고 사항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또한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유감을 표시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음.



- 이에 대해 북한 유엔대표부의 박덕훈 차석 대사는 표결전 발언에서 “서방국가들이 선택적 이중잣대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다루려 하고 있다”며 “이는 정치적 음모이며, 우리는 이 결의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도 “인권문제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다뤄져야 한다”면서 결의안 채택을 반대했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역시 반대표를 던졌음.
- 유엔이 채택한 대북인권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나, 192개 유엔 회원국들의 총의를 모았다는 점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추후 조치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정치적 의미를 가짐.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FTA, 재협상 요구 분야 확산>(11/19)

- 한미 양국이 지난 11일 자유무역협정(FTA) 쟁점현안 협상에서 합의에 실패한 뒤 양국 내부에서 재협상을 요구하는 분야가 많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당초 자동차와 쇠고기 분야를 중심으로 시작된 한미간 FTA 추가협상이 양측 내부에서 각각 불만을 갖고 있는 다른 분야로까지 논의범위가 넓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음. 이렇다가 결국 본격적인 재협상 국면으로 접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음.
- 국내에서는 정부가 제한적 재협상을 시인한 뒤 한미 FTA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속한 분야도 다시 협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진작부터 전면 재협상을 요구했던 야당인 민주당은 정부에 대한 공세수위를 높였고, 자유선진당도 자동차문제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상당수 수용할 경우 농업 분야에서 양보를 얻어내 ‘이익의 균형’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여당인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FTA 협정문에 불가피하게 손을 대게 된 만큼 한국이 기존 협정문에서 실현하지 못한 이익을 확보하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일례로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19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재협상이라고 하는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면서 “이제 한미 FTA를 깰 수도 있다는 각오로 반대급부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음. 그는 “미국의 취약분야가 자동차라면 우리의 취약분야인 농산물과 섬유, 의약품 등 반대급부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임. 기존 한미 FTA에 불만을 나타냈던 업계 및 이익단체들 및 정치인들은 한미 FTA 합의 실패를 환영하면서 “제대로된 FTA를 해야 한다”고 앞다퉈 주장하며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음.



- 미 하원의 마이크 미쇼드 의원 등 기존 한미 FTA를 비판해온 민주당 소속 의원 9명은 18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자동차와 쇠고기 외에도 심각한 우려 사항들이 있다”며 노동과 투자, 금융 조항을 예로 들며 재협상 필요성을 역설했음.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도 의원들에게 무엇이 우려사항인지 목록을 제출해 달라며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선 한국 측에 요청해 의회 비준을 성사시킬 뜻을 밝혔다고 외신은 전했다.
 - 양국에서 이 같은 분위기가 확산되자 당장 협상에 나서야 하는 양국 정부는 곤혹스러워하고 있음. 한미 FTA에 대해 전면 재협상이 이뤄질 경우 ‘판도라 상자’가 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미 FTA의 장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임. 때문에 양국 정부는 한미 FTA에 대한 조속한 발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논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 한국 정부는 추가협상이 전면적인 재협상은 아니라고 분명한 선을 그으며 이익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극히 제한된 분야에서 주고받기식 협상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쇠고기 논의 절대 불가’ 입장도 여전히 고수하고 있음. 미국도 전면적인 재협상에 대해선 부담스러워하고 있음. 오바마 대통령은 미쇼드 의원 등과의 만남에서 “결코 (협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뜻을 박았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FTA 1차 합의 실패 이후 양측 모두에서 재협상을 요구하는 분야가 많아지면서 차후에 열린 FTA 협상은 이전보다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특히 현재 한미 FTA 협상은 제로섬 게임 양상이어서 ‘이익의 균형’이라는 절묘한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임.
- **백악관 “한미FTA, ‘최상’ 아니라서 타결안해”(11/18)**
- 미국 백악관은 1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논의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시 타결되지 않은 것은 미국의 이익에 최선으로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확인했음.
 -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한국과의 FTA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그 협정이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최상(best)의 협정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음.
 - 그는 “그 때문에 우리는 계속 진전을 만들어가려고 한다”고 말했음. 그는 이어 “FTA가 의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초당적인 지지와 상공회의소와 같은 그룹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美, 한국車 관세철폐기간 연장 요구(11/16)**
- 자유무역협정(FTA) 쟁점현안 해결을 위한 한미간 논의와 관련, 미국은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산 자동차의 안전 및 환경기준 완화뿐만



- 아니라 미국에 수출되는 모든 한국산 자동차의 관세 철폐기한에 대한 연장을 요구했던 것으로 16일 드러났음.
- 미측은 또 한국의 자동차 수출 급증에 대비해 자동차에만 적용될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을 마련할 것과 완성차 판매시 제3국에서 수입한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환급(Duty drawback)도 폐지할 것을 주장했던 것으로 밝혀졌음.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 출석, 한미간 FTA 협의 결과에 대해 보고하면서 이번 협의에서 미국은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시장 접근 강화.확대 방안과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데 대한 보호장치를 요구했다며 이같이 소개했음.
 - 김 본부장은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수출증가에 따른 보호장치와 관련, 미국은 현행 협정문에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2.5%의 관세를 즉시 또는 3년에 걸쳐 철폐하도록 돼 있는 것을 좀 더 오래 가져가고 싶다고 요구해 한국측이 이를 강하게 거부했다고 말했음.
 - 또 미국은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용이하게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고 김 본부장은 전했다.
 - 한국시장 접근 확대문제와 관련, 미국측은 현재 연간 판매대수 6천 500대 미만에 대해서만 적용토록 협정문에 규정돼 있는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통과 차량에 대한 자기인증 기준을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그 적정 기준에 대해선 한미 양국간 견해차가 있다고 김 본부장은 밝혔음.
 - 뿐만 아니라 미국은 한국이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녹색성장 차원에서 추진하는 자동차 연비 및 배기가스 기준 강화조치가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시장 접근의 장벽이 될 우려가 있다며 미국차에 대해선 '완전 예외'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다가 차후에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입장을 수정했음.
 - 김 본부장은 "미국, 유럽연합, 일본, 캐나다 등 다른 나라도 (소수 판매차량에 대해선) 어느 정도 적용을 완화하고 있어 우리도 그런 장치를 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미 양국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음.
 - 자동차 관련 규정의 투명성 제고 문제와 관련, 미국측은 신기술을 적용한 자동차에 대한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고, 주요한 기술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 자동차 업계에서 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일정 정도 유예기간을 둘 것을 요구, 한국측도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김 본부장은 전했다.
 - 이어 김 본부장은 "우리측은 자동차 문제에 관한 한 미측의 정치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면 이익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일정 부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기본입장을 갖고 협의에 임했다"고 말했음.



- 쇠고기 문제와 관련, 김 본부장은 “쇠고기 문제에 대해 미국측에서 협의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고, 우리는 강하게 거부해 논의 자체가 없었으며, 논의가 없었던 것에 대해 미국측이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우리는 2008년 쇠고기 수정협상으로 더 이상 협의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미국은 쇠고기 문제는 완전히 풀리지 않은 현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FTA실패’ 불뚱뿔라..백악관.민주당 부심(11/16)

-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아시아순방을 마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받은 정치적 타격을 만회하기 위해 백악관과 민주당이 고심하고 있음.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순방에서 ‘경제외교’에 중점을 뒀지만, 서울 방문 과정에서 한국과의 FTA 합의에 이르지 못함으로써 미 언론으로부터 ‘실패’라는 평가를 받았음.
- 오바마 대통령의 최측근인 데이비드 액셀로드 백악관 선임고문은 14일 NBC방송에 출연, 중간선거 패배가 오바마 대통령의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을 약화시킨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며 오바마 옹호에 주력했음.
- 구체적으로 한미 FTA 합의 실패와 관련, “여러분은 한국에서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위해 싸우는 미국 대통령을 갖고 있다”면서 이번 합의 실패가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오바마의 결단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 그는 “테이블에 오른 협정이 충분하지 않았다. 미국 자동차업계에도 충분하지 않았고, 쇠고기(분야)에도 충분하지 않았다”면서 “(그래서) 우리는 협상을 계속해 나가기를 원했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음.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미국 근로자와 미국 산업계를 위한 최선의 협정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음.
- 민주당 소속의 켄트 콘래드 상원 예산위원장은 ABC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동맹국인 한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충격을 받지 않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전혀 충격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음. 그는 “대통령이 그렇게 한 것은 약함보다는 강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왜냐하면 대통령은 나쁜 합의를 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음.
- 그는 자신이 한국과의 협상에 깊이 관여해 왔으며, 한국은 자신들이 한 과거의 약속을 피하기 위한 모든 전략을 동원한다고 주장하면서 “통령은 한국에 그것(과거의 약속)을 요구했고, 시장을 열고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면서, 합의를 위한 합의는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말했음.
- 그는 “동맹국의 일부에도 공정한 무역을 주장하고 지지하는 대통령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 다행스럽다”고 말했음.



- 이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 자신부터 한미 FTA 타결 실패 후 “발표만을 하기 위한 합의는 하지 않는 게 낫다”는 입장을 보였고, 이후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톰 도널런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잇따라 나서 “제대로 된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내놓으면서 오바마 대통령을 옹호했었다.
- 이와 관련, AP통신은 한미 FTA 합의가 나오지 않는데 대해 미 언론이 ‘실패’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나서자 백악관이 ‘피해관리 모드(damage control mode)’로 전환해 도널런 보좌관을 백악관 기자단에 보내 관련 브리핑을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나. 한·중 관계

● 中, 우다웨이-김계관 협의 韓에 통보(10/14)

- 중국 외교부가 김계관 북한 제1부상의 방중을 계기로 한 북중간 북핵 6자회담 결과를 14일 한국에 통보했음. 중국 외교부는 이날 오전 베이징(北京) 소재 주중 한국대사관의 임성남 정무공사를 불러 지난 12일 중국을 방문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과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간의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 우다웨이 특별대표는 13일 방중한 일본의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에게도 같은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측은 미국, 러시아 등의 6자회담 당사국들에도 같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졌음. 그러나 중국 측이 밝힌 북중 협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음.
- 김 부상과 우다웨이 특별대표간 이번 회담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 채택이후 북중 양국이 적극적인 재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우다웨이 특별대표의 8월 16~18일 방북, 그리고 그에 이은 한·미·일 3국 순방 이후에 이뤄진 것임.
- 중국은 그동안 ‘북·미 접촉→6자 예비회담→6자 본회담’의 3단계 수순을 거쳐 6자회담을 재개하자는 입장이었으나 한·미·일 3국 모두 그 제안에 대해 수용불가라는 입장을 밝힌 터여서, 이번에 북중 양국이 그와 관련해 어떤 결과를 도출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우리측은 6자회담 재개는 북한의 진정성있는 행동변화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음. 중국 당국은 아울러 조만간 공산당 대외연락부를 통해 우리 측에 저우 상무위원의 방북과 그에 앞선 북한 노동당의 최태복 중앙위원회 비서의 방중을 통한 북중 접촉 결과를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 <외교부, 對中 외교역량 대폭 강화>(11/16)

- 외교통상부가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부쩍 커진 중국에 대한 대대적인 외교역량 강화에 나설 예정임. 외교부는 16일 내년에 정부와



- 민간이 참여해 중국과 교류를 활성화하는 ‘한·중우호협회(가칭)’를 만드는 방안을 총리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 외교부 관계자는 “그동안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투자가 크게 늘었지만 중구난방식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며 “‘한·중우호협회’는 중국 투자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또 외교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외교안보연구원은 중국의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는 중국연구센터를 신설, 세미나 등 각종 연구행사를 개최할 계획임. 현재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산하 중국과도 현재 한개에서 2개로 확대될 예정임.
 - 외교부는 중국과에 중국의 국내정세, 대외관계 등을 신속히 파악하는 중국분석팀을 만들어 정책에 활용하고 정기보고서도 발간할 방침임. 아울러 외교부는 한국과 중국의 우호정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중국의 역사, 문화, 여론동향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반한정서 관리팀’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
 - 이와 함께 외교부는 현재 차관급으로 돼 있는 한·중 고위전략대화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대(對)중국 외교정책 자문단을 구성하는 한편, 중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인적교류 확대, 한·중 언론인 협력채널 구축, 중국인 유학생과 네트워킹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외교부는 내년도 대중국 외교역량 강화사업으로 올해 3억9천만원에서 38억9천만원으로 대폭 늘려 국회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 한·일 관계

● 박희태 의장, 日 총리에 G20 협력 요청(10/13)

- 한국 입법부 수장이 일본 총리를 만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 대한 협력을 요청

● 日 방위상 내달 방한..軍정보보호협정 논의(11/21)

- 한국과 일본의 국방·방위 장관이 만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 MIA) 체결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1일 보도했음. 이를 위해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이 내달 17, 18일 이틀간 한국을 방문하는 쪽으로 일정을 조정 중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 한국과 일본은 방위 비밀의 보전·교환에 관한 규칙을 포괄적으로 정하는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일본 측은 이를 계기로 한국과 안전보장 협력을 본격화하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 미·중 관계

● “美 정부기관 이메일, 中 서버로 빼들려져”(11/18)

- 미국 정부기관의 이메일이 올해 초 중국 해커들에 의해 중국 업체 서버로 빼들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음.
- 미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는 1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4월8일 오전 군(軍)을 비롯해 미 정부의 주요 기관 계정을 통해 전송된 이메일이 중국 해커들에 의해 18분간 중국 통신업체인 차이나텔레콤(中國電信) 서버들을 거쳐 갔다고 지적했다.
-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전세계 온라인 트래픽의 15% 정도가 중국 업체들의 서버들을 거쳐갔음. 이에 영향을 받은 미 정부기관은 상원, 육해공군, 해병대, 국방장관실, 항공우주국(NASA), 내무부, 국립해양대기청(NOAA) 등 민감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음. 또 컴퓨터 제조업체 델, IBM 등과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등 민간기업의 인터넷 트래픽도 중국 서버들로 빼들려졌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 UCESRC 보고서는 중국 통신업체들이 인터넷 트래픽을 중간에서 가로챌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에 따른 안보 위협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음. 보고서는 “위원회가 중국 통신업체들이 가로챌 정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이러한 사태들은 심각한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접근할 수 있다면 특정 사용자나 사이트도 감시할 수 있다”고 경고했음.
- 더불어 “(해커들이) 데이터 이동을 방해하고 이용자의 해당 사이트 접속을 막을 수도 있으며, 이용자가 의도하지 않는 곳으로 정보를 빼돌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UCESRC의 캐럴린 바들로뮤 부위원장은 미국 네트워크에 침투하려는 중국의 개인 및 기관들의 노력과 기술 수준이 강화되고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음. 또한 래리 위즐 위원은 “당신이 18분 동안 이메일 트래픽을 쥐고 있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당신은 (그 사이) 연락을 주고받은 모든 사람의 인터넷 주소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음.
- 이 위원회는 의회가 미국 정부기관을 겨냥해 이뤄진 이번 공격의 규모와 심각성에 대해 정식으로 조사를 진행할 것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촉구해야 한다고 주문했음. 그러나 중국의 차이나텔레콤은 18일 AFP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미국 측의 인터넷 트래픽을 가로챌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음.
- 미국 정부는 앞서 지난 8월 중국군이 미국 기업과 정부기관의 전산망을 은밀하게 공격하려고 민간 컴퓨터 전문가까지 활용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한 바 있음. 미 국방부는 당시 중국의 사이버 위협 관련 보고서에서 중국 인민해방군(PLA)이 적대국의 컴퓨터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바이러스를 개발하려고 ‘정보전 부대’



를 운영하고 있고 이들 부대에는 민간인 컴퓨터 전문가도 있다고 주장했다.

마. 미·일 관계

● 美해병대-日육상자위대, 동중국해 방위 협의(11/17)

- 미국 해병대와 일본 육상자위대 간부들이 17일 일본 방위성에서 난세이(南西)제도 등 동중국해 방위 문제를 협의하기 시작했다고 NHK 방송이 보도했음. 미 해병대와 일본 육상자위대가 장교급 협의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워싱턴에 있는 미국 해병대 총사령부와 일본 육상막료감부(참모부)의 작전담당 간부 16명씩이 참가했고, 19일까지 사흘간 대(對)중국 방위태세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됨. 난세이제도는 일본 규슈(九州) 남부와 대만 동부 사이에 뻗어 있는 섬들로, 오키나와(沖繩)제도와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дя오위다오<釣魚島>) 등을 포함함.

● “美-日, 日유사시 방위협력방안 협의키로”<교도>(11/17)

- 미일 양국이 일본이 공격을 받을 경우의 방위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올해 안에 실무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16일 ‘미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음.
- 이 통신에 따르면 양국은 외무.방위 담당 국장급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2005년 2월에 합의한 ‘공동전략 목표’를 수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공동전략목표는 국제 테러나 북한의 핵개발, 중국-대만 분쟁 등을 상정해 마련했지만, 최근 중국의 군사력 증가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진전 상황 등을 고려해 일부 내용을 바꿀 것으로 예상됨. 양국은 또 1997년에 만든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임.
- 교도통신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13일 요코하마에서 만나 내년 봄 간 총리의 방미시 양국이 동맹 심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로 합의한 것도 이같은 실무협의 일정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풀이했음. 일본 유사시 미일 양국의 방위협력 방안은 자민당 정권 시절에도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었음.
- 하지만 최근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дя오위다오<釣魚島>) 부근에서 벌어진 중국 어선과 일본 순시선의 충돌 사건 등을 계기로 미국 정부 내에서 대중 강경론이 대두하면서 방위협력 강화 주장에 힘이 실렸다고 이 통신은 설명했다.

바. 미·러 관계

● <민주당 패배로 위협받는 미.러 신시대>(11/16)

- 미국 민주당의 중간 선거 패배로 미국과 러시아의 새로운 관계 설정이 위협받고 있음. 양국 간 안보 협력은 물론 군축 및 아프가니스탄



- 과 이란 문제까지도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임.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불편한 관계를 “새롭게 조정”하려 나선 지 2년도 되지 않아 러시아는 민주당의 중간 선거 패배가 양국간 관계를 다시 냉각시키게 되지 않을까 신경을 쓰고 있음.
 - 전문가들은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의 재출발이 어떻게 될지는 오바마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러시아대통령이 지난 4월 서명한 새로운 전략 무기감축협정(START)에 달려 있다고 지적함. 두 나라의 핵무기 보유량을 대폭 줄이고 양국간 신뢰를 형성하며 다른 나라에게도 군축의 신호를 보내게 될 이 협정은 미국과 러시아의 의회를 통과해야 효력을 발휘함.
 - 오바마 대통령은 미 상원이 이 협정을 현 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올해 말까지의 이른바 레임덕 회기에 통과시켜 주기를 바라고 있음. 그렇지 못할 경우 이 협정은 민주당의 의석이 줄어든 채 내년 초 출범하는 새 의회에서 다뤄져야 함. 이렇게 될 경우 비준에 필요한 67표의 확보가 더 어려워질 수 있음.
 - 러시아는 하원 격인 국가두마에서 비준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지만 미 의회에서 비준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러시아도 이를 비준하지 않을 것임. 전문지 “세계 속의 러시아”(Russia in Global Affairs) 편집인 표도르 루키야노프는 “관계 재설정엔 이것과 함께 시작되며 이는 여러모로 핵심적인 요체”라고 15일 강조했다. 그는 이 협정이 비준되지 않으면 “그 밖의 모든 것이 느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러시아는 부시 시대의 미사일 방어 계획을 오바마 대통령이 포기하고 핵감축과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전망이 밝아지면서 미국에 협조적 자세로 나오기 시작했다. 이란의 핵개발계획에 대한 유엔의 추가 제재를 지지하고 계약을 파기하면서까지 이란에 대한 러시아의 고성능 S-300 대공 미사일 판매를 금지한 것이 그런 사례임. 러시아는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미군이 자국 영공을 통해 보급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미군 수송의 중간 기착지인 키르기스스탄의 공군 기지 폐쇄 요구도 중단했음.
 -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전략무기감축협정의 비준이 실패할 경우 러시아의 추가 협력 가능성은 없어지고 기존 협력 관계마저 위협받을 것이라고 워싱턴 소재 미국진보센터의 새뮤얼 채립 연구원은 전망했음.
 - 비준 실패는 러시아에서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매 파와 군수 산업과 관련된 로비세력의 위치도 강화시킬 것임. 루키야노프는 러시아의 실세 권력자인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도 비준이 안 될 경우 “매우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했음. 채립 연구원도 “러시아는 국제문제에서 말썽을 일으킬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다”면서 러시아가 그런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음.



사. 중·일 관계

● <中 “다오위다오 진입” 주장..긴장 고조되나>(11/21)

- 일본이 중국 어업지도선의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 <釣魚島>) 영해 진입 시도를 막았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이 반대로 성공을 주장하며 지속적인 진입 태세를 보여 영유권 갈등이 다시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 중국 남방일보(南方日報) 인터넷판은 21일 자국의 최신 어업지도선인 위정(漁政)310호가 이끄는 어업지도선 편대가 다오위다오 해역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했음. 위정310호에 동승한 남방일보 기자는 20일 오전 6시께 이 배가 다오위다오 해역에 처음 진입하는 것을 전자지도상에서 명확히 확인했다고 전했음.
- 반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20일 중국 어업지도선 2척이 센카쿠 열도로부터 23km 떨어진 지점까지 접근했지만 일본 영해를 침범하지는 않았으며 일본 순시선들이 이들 선박에 즉각 떠나라고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음.
- 남방일보 보도에 따르면 위정310호와 위정 201호는 다오위다오 해역에 진입한 직후 일본 순시선 2척으로부터 떠날 것을 요구받자 “다오위다오는 신성한 중국의 영토다. 우리는 자기 해역에서 정상적인 어정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대응했음.
- 그러나 일본 측이 현장에 순시선을 7척까지 늘리고 정찰기 2대와 헬리콥터 1대까지 추가 투입해 긴장이 높아지자 중국 어업지도선 편대는 일본 측에 항의하면서 ‘합리적인 거리’까지 물러나 다오위다오 주변을 돌고 있음.
- 2천580t급인 어정310호는 최초로 헬리콥터를 탑재하고 광대역 위성 통신시설 등 첨단장비를 갖춘 중국의 최신예 어업지도선으로 지난 16일 광저우(廣州) 부두를 떠나 20일간으로 예정된 첫 임무를 시작했다.
- 중국의 이번 다오위다오 해역 진입 시도는 일본의 실효 지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속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이곳을 분쟁 지역으로 각인시키는 한편 최신예 어정선의 현장 대응 능력을 점검하려는 차원에서 나온 행동으로 풀이됨. 비록 일본의 강력한 대응으로 일단 어느 정도 거리로 물러나기는 했지만 어정310호가 이끄는 어업지도선 편대는 다오위다오 주변에서 10여일 가량 더 머물면서 작전을 계속할 예정이어서 중국 측의 다오위다오 진입 시도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더욱 주목할 만한 부분은 어정310호가 Z-9AG 헬리콥터를 2대나 탑재할 수 있다는 점임. 일본은 그 동안 3000t급 순시선과 정찰기 등을 동원해 해상과 공중에서 중국 어업지도선의 다오위다오 영해 진입 시도를 입체적으로 차단해왔음. 그러나 앞으로 어정310호에서 불시에 헬리콥터를 띄워 다오위다오 영공으로 진입시킨다면 접근을



막기가 쉽지 않음. 따라서 어정310호의 투입이 다오위다오에 대한 중국의 공세적 대응의 전주곡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베이징 외교가는 주목하고 있음.

● <日, 對中 군사전략 본격가동하나>(11/21)

- 중국의 군사력 팽창과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 분쟁에 위협을 느낀 일본이 대대적인 방위력 강화조치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일본은 다음달 발표할 새로운 '방위계획대강'(防衛計劃大綱)을 통해 중국과 인접한 요나구니(與那國)섬에 군대를 배치하고 일본의 '무기수출 금지 정책' 폐지 방침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가 21일 보도했음.
- SCMP는 일본 정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최종 검토단계에 있는 방위 계획대강에는 동중국해 부근의 남서쪽으로 길게 뻗어 있는 섬들에 군대를 배치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방위계획대강은 센카쿠 열도 남서쪽에 위치한 일본의 최서단 섬인 요나구니섬에 중국 해군을 감시하기 위한 군대를 배치하고, 주변 4~5개 섬에 군사시설을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SCMP는 보도했음.
- 일본의 군사전문가들은 중국이 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일본이 대중국 해상봉쇄 전략을 구사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이와 함께 방위계획대강에는 일본의 무기수출과 외국과의 무기 공동개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무기수출 3원칙'을 재검토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SCMP는 전했다. 1967년 사토(佐藤) 정권 당시 제정된 무기수출 3원칙은 공산권 국가, 유엔 결의로 무기수출이 금지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에 대한 무기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이었지만 이 원칙은 1976년 미키(三木) 정권 이후 사실상 모든 국가에 대한 수출 금지로 확대 적용돼 왔음.
- 방위계획대강은 무기수출 3원칙을 수정해 일본 군수기업들이 미국은 물론 호주, 인도, 한국의 군수산업체와 무기 공동개발에 참여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 일본은 또한 미국이 개발 중인 스텔스 기능을 갖춘 최신예 전투기 F-35를 구매하는 한편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SCMP는 전망했음. 아울러 방위계획대강은 현재 6척에 불과한 잠수함을 22척으로 늘리는 등 해군 함정 보유를 확대해 일본 주변 해역에서 중국 해군 함정의 기동을 억제하고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방침임. 이밖에 미국과 호주, 한국,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이와 관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는 내년 봄에 미일동맹을 강화하는 내용의 '미일 안전보장 공동성명'



을 발표할 예정이다.

- 방위계획대강에는 또 일본 자위대가 향후 10년 이내에 오키나와섬 서남부의 나하(那覇)기지에 배치한 전투기를 현행 20대에서 30대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홍콩의 문회보(文匯報)가 21일 보도했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위계획대강에 대해 방위.안보분야 전문가인 모리모토 사토시 다쿠쇼쿠대학(拓殖大) 교수는 “이번 대강이 일본 방위전략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음.
- 방위계획대강은 일본의 방위전략 기본방침을 담은 것으로 1957년 처음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6차례 개정됐으며, 이번에 6년만에 개정됨. 중국은 언론을 통해 거론되고 있는 일본의 방위계획대강에 대해 아직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내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中 “올 희토류 수출량 절반 日에 갔다”(11/17)

- 중국 정부가 올해 희토류 수출량의 절반가량이 일본에 수출됐다고 밝혔음. 중국 상무부는 16일 야오젠(姚堅) 대변인 발표를 통해 올 1~9월 중국의 희토류 수출량은 모두 3만2천200t으로 이 가운데 49.8%인 1만6천t이 일본에 수출돼 작년 동기대비 167% 증가했다고 공개했음. 상무부가 이처럼 희토류 수출량을 공개한 것은 수출을 제한한다는 일본의 공격에 맞서려는 의도로 보임.
- 상무부는 아울러 같은 기간에 미국에는 6천200t의 희토류가 수출됐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5.5% 늘어났다고 소개했다. 이 기간에 희토류 수출가격은 t당 평균 1만4천800달러에 달했음.
- 야오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환경오염 우려 때문에 희토류 개발과 생산을 감축시키고 있으며 이로써 희토류 수출 킬터도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오 대변인은 올해 희토류 수출킬터는 작년대비 39%, 개발과 생산량은 각각 25%와 23%씩 줄였다고 밝혔음.
- 그는 “중국의 희토류 부존량은 전 세계의 30%인데 수출량은 전 세계의 90% 이상”이라며 자원보존과 환경오염을 막기위해 희토류 생산 감축은 불가피하다고 역설했음. 그는 그러면서 “중국의 희토류 생산과 수출 제한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 상무부는 아울러 희토류 수출 관세를 15~25% 추가했는가 하면 41종의 희토류 관련 가공무역품을 무역금지품목으로 지정했다. 상무부는 이와 함께 외자기업 10곳을 포함한 32곳의 희토류 생산 기업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음.

● “中日 갈등 해빙조짐” <차이나데일리>(11/15)

- 중국의 관영 영자지인 차이나데일리가 일본 요코하마(横浜)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일 정상회담과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된 사실을 전하면서 결빙된 양국관계가 해빙조짐



- 을 보이고 있다고 15일 보도했음.
- 이 신문은 지난 9월 7일 닌슈타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열도) 부근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순시선의 충돌 이후 악화일로로 치달아온 양국관계가 두달여만에 해소될 희망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 신문에 따르면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13일 정상회담을 가진데 이어 14일 양제츠 외교부장이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일본 외무상과 만나 정상간 합의 후속절차와 더불어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했음. 중일 양국은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국민간 우호관계를 증진하고 양국 협력관계를 개선하고 촉진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음.
 - 차이나데일리는 마에하라 외상이 중단된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 논의를 재개하자고 제안했으나 양 외교부장은 적절한 분위기 조성이 먼저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고 소개했다. 이 신문은 또 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기후변화협약 문제 등도 논의됐다고 덧붙였다.
 - 신문은 아울러 후 주석과 간 총리간의 정상회담은 닌슈타오 갈등 이후 양국간에 첫 개최된 ‘공식적인’ 정상회담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회담에서 후 주석이 양국이 평화, 우호, 협력의 길로 가는 것이 양국민의 이해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차이나데일리는 그러나 전문가들을 인용해 양국 정상회담과 외교장관회담 개최에도 닌슈타오 영토분쟁과 관련해 즉각적인 해법은 나오지 않았다고 보도했음.

아. 일·러 관계

● 러 외상, 日 영토반환 요구에 강경 자세(11/19)

-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지난 13일 러일 외무장관 회담때 남 쿠릴열도(일본은 ‘북방영토’로 표기)의 반환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고 NHK방송이 19일 보도했음.
- 이 방송은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지난 13일 요코하마(横浜)에서 열린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평화조약 체결후 영토분쟁을 빚고 있는 남 쿠릴열도 4개섬 가운데 시고탄(色丹)과 하보마이(齒舞)의 일본 반환을 명기한 1956년 일-소 공동선언에 대해 “구소련이 왜 이런 공동성명을 체결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는 구소련으로부터 승계한 의무로 돌아갈 용의가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선의의 행위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본이 구소련과 맺은 모든 조약을 러시아가 승계하기로 한 1993년의 도쿄선언에 대해 “도쿄선언에서의 쿠릴열도 4개섬에 관한 언급은 이들 섬이 러시아에 귀속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 이에 대해 마에하라 외상은 “구소련과의 일러 공동성명은 4개섬에 대한 반환에 결론이 나지 않아 2개섬에 대해서만 언급됐지만, 1993년의 도쿄선언은 4개섬의 (일본) 귀속에 대한 확인이 평화조약의 대상이라는 것을 쌍방이 확인한 것이다”고 밝혀 라브로프 장관과 전혀 다른 견해를 보였음.

● 러시아 “일본과 영토협상 거부 안해”(11/19)

- 러시아 정부는 18일 북방영토 문제에 관한 일본과의 협의를 거부하지 않고 계속할 방침을 천명했음. 알렉세이 사조노프 러시아 외무부 정보연론 부국장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는 일본과 북방영토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표명한 적이 없다”고 밝혔음.
- 사조노프 부국장은 러시아가 북방영토와 관련한 입장을 이미 명확히 표시했다면서 “문제의 존재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정치대화와 경제협력의 강화, 인적교류를 통해 일본과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음.
- 그러나 사조노프 부국장은 옛 소련과 일본이 평화조약 체결 후 러시아에선 남쿠릴열도로 지칭하는 북방영토의 4개 섬 가운데 시코탄(色丹), 하보마이(齒舞)의 일본 반환을 명기한 1956년 일-소 공동선언에 대해선 “상황을 지켜보자”며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했음.

● “러, 북방섬 日 반환 협상 안해” <러紙>(11/15)

- 러시아가 일본과 영토 분쟁을 빚고 있는 쿠릴열도 중 2개 섬을 일본에 반환하려던 계획을 폐기했다고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가 15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음. 코메르산트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시코탄(色丹)과 하보마이(齒舞) 등 2개 섬 반환 방침을 변경, 향후 이 문제로 일본과 협상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음.
-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일본 측이 2개 섬을 먼저 돌려받고 나머지 2개 섬도 결국 돌려받겠다는 “만화영화같은” 환상을 갖고 있다며 “이 섬은 러시아 영토이며 이 문제에 대한 협의는 없다는 것이 지금 우리의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코메르산트는 전했다.
- 또 최근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즈프롬의 알렉세이 밀러 사장이 천연가스 합작 사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예정했던 일본 방문을 취소한 것과 관련, 가즈프롬이 일본 대신 한국을 합작 상대로 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코메르산트는 덧붙였다.
- 러시아는 구 소련 당시인 1956년 10월 일본과의 국교회복 공동선언에서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쿠릴열도 4개 섬 중 시코탄과 하보마이를 향후 일본에 인도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인도하지 않고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는 지난 13일 정상회담을 열고 영유권 분쟁 해결책을 논의했으나 양쪽 입장차만 확인한 채 성과없이 회담을 마친 바 있음.



[참고 1] <북한이 공개한 원심분리기와 우라늄 농축>(11/21)

원심분리기 이용 핵무기 제조 과정

지난주 북한을 방문한 미국의 핵 전문가 지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이 봤다고 전한 원심분리기는 고농축우라늄(HEU)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시설이다.

우라늄 235 '우라늄 235'만 핵분열 가능

농축과정인 원심분리기에서 소량의 우라늄 추출

여과기를 통과한 기체상태의 우라늄

저농축 우라늄

농축우라늄 93% 군사용 3~4% 민간용

실린더 회전

농축 우라늄 235

기폭제

재래식 폭약

자료/ 미국과학자연맹(FAS) 연합뉴스

우라늄 농축 과정

천연우라늄
우라늄-238(99.3%)과 우라늄-235(0.7%) 같은 동위원소로 구성(핵에너지 생산요소)

농축 과정
원심분리를 통해 우라늄238로부터 우라늄235를 분리해 농도를 높이는 과정

원심분리기에 우라늄가스 주입

2번 원심분리기에 농축우라늄-235 가스 주입

상대적으로 무거운 저농축우라늄-238은 아래로 내려옴

중심부에 있던 상대적으로 가벼운 우라늄235는 위로 이동

위 원심분리과정을 반복하여 우라늄 농축

활용

민간용 : 발전용으로 사용 (우라늄-235의 함유율 4~5%)

군사용 : 우라늄-235의 함유율을 최소 90%까지 농축

자료/ 글로벌시큐리티 AFP=연합뉴스그래픽

장성구 기자 20101121 yonhap_graphics@트위터 YONHAPNEWS 김도일 기자 20101121 yonhap_graphics@트위터 YONHAPNEWS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지난주 북한을 방문한 미국의 핵 전문가 지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이 봤다고 전한 원심분리기는 고농축우라늄(HEU)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시설이다.

핵무기는 제조원료에 따라 플루토늄탄과 우라늄탄으로 나뉜다. 플루토늄탄은 천연상태의 우라늄을 정제해 플루토늄이 함유된 핵연료봉을 만들고 이를 다시 재처리(reprocessing)해 핵무기를 개발하는 방식이다. 이에 비해 우라늄탄은 천연 우라늄을 정제해 그 속에 포함된 우라늄(U235)의 비율을 0.7%에서 90%이상으로 농축시켜 만드는데 이 과정을 핵농축이라 한다. 북한이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방북시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고농축우라늄(HEU.Highly Enriched Uranium) 프로그램이 바로 그것이다.

북한이 최근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경수로는 농축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한다. 물론 3-5% 정도의 저농축 우라늄이다. 하지만 농축농도를 90% 이상으로 올려 HEU 상태가 되면 이는 핵무기 개발로 전용될 수 있다. 우라늄 농축은 기체확산법, 원심분법, 레이저분리법, 화학교환법, 전자분리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주요 핵보유국들은 대부분 기체확



산법을 이용해 핵무기를 만들지만 북한이 채택하고 있는 방법은 원심분리법이다. 마치 세탁기를 돌리듯 원통 속에서 가스 상태의 육불화우라늄(UF6)을 고속회전시켜 원심력을 이용해 U235를 분리하는 방법이다.

연간 핵무기 1개(농축우라늄 20kg 기준)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심 분리기 1천대가 필요하지만 전문가들은 대체로 원심분리기 2천대 정도를 우라늄탄 임계질량(20kg 가량) 제조에 필요한 수준으로 제시해왔다. 원심분리기 개당 가격이 16만~24만 달러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분리기 1천대를 확보하는데 최소 1억5천~2억5천 달러가 든다.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사정을 감안하면 엄청난 금액이지만, 북한이 우라늄탄 개발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핵무기를 쉽고 은밀하게 개발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이다.

우선 기체확산법에 비하면 원심분리법은 저렴한 편이다. 기체확산법을 이용할 때 드는 전기의 1/50만 있으면 작동이 가능하고 설치 면적도 900㎡ 수준에 불과하다. 원심분리기만 확보한다면 어디서든 좁은 공간에서 농축우라늄의 은밀한 생산이 가능하다. 여기에 방출되는 방사능도 매우 적어 외부 감시가 어렵기 때문에 공장, 광산, 군부대, 지하실, 땅굴 등 어디에서든 작은 시설 내에 간편하게 은닉 설치할 수 있다.

여기에 농축우라늄은 플루토늄과 달리 핵실험을 거치지 않고서도 핵무기 제조가 가능하다. 농축 우라늄만 확보되면 포신형 핵무기를 손쉽게 제조할 수 있으며 이를 노출시키지 않은 채 적절하게 도발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nomad@yna.co.kr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0/11/21/0503000000AKR20101121040500043.HTML>



[참고 2] <북핵 HEU 관련 주요 일지>(11/21)

다음은 2002년 이후 HEU를 둘러싼 북핵 관련 일지.

◇2002년

- ▲10. 3~5 = 제임스 켈리 미 정부 특사 방북(북한, HEU 프로그램 시인)
- ▲10.17 = 미국,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시인 사실 발표
- ▲10.27 = 한·미·일 3국 정상, 북한의 HEU 프로그램 폐기 촉구
(3국 정상회담 공동발표문)
- ▲11.14 =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 대북한 중유공급 중단 발표
- ▲12.21 = 북한, 5MW 원자로 동결 해제
- ▲12.26 = 북한, IAEA 사찰관 3명 추방 통보

◇2003년

- ▲ 1.10 = 북한, NEPT 탈퇴 선언(정부 성명)
- ▲ 1.28 = 북한 외무성 대변인, 북한의 HEU 프로그램 보유 의혹을 부인하는 담화 발표
- ▲ 2.26 = 북한, 5MW 원자로 재가동
- ▲ 4.18 = 북한 외무성 대변인, 연료봉 8천개 재처리가 마무리 단계라고 언급(조선중앙통신)
- ▲10. 3 = 북한, 연료봉 8천개 재처리 완료 발표(외무성 대변인)
- ▲11. = 북한, 경수로 부지 내 건설장비 및 물자 반출 금지
- ▲12. 1 = KEDO, 금호지구 경수로공사 1년간 잠정 중단

◇2004년

- ▲ 2. 2 = 파키스탄 정부, 알 카디르 칸 박사의 대(對)북한 우라늄농축 기술 및 장비 제공사실 발표
- ▲11.26 = KEDO, 경수로 공사중단 1년 추가연장

◇2005년

- ▲ 2.10 = 북, 핵무기 보유 선언 (외무성 성명)
- ▲ 5.11 = 북, 영변 5MW 원자로에서 폐연료봉 8천개 인출 완료 발표
(외무성대변인 성명)

◇2006년

- ▲ 7. 5 = 북, 장거리 미사일 발사(함경북도 무수단리)
- ▲10. 9 = 북, 최초 핵실험 실시

◇2007년

- ▲ 2.13 = 6자회담 '2.13 합의문' 채택
- ▲ 3.13~14 =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 방북



- ▲ 3.19 = 북, BDA 자금 동결 문제삼아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불참
- ▲ 6.25 = 북 외무성, BDA 동결자금 북한계좌로 송금 확인
- ▲ 6.26~30 = IAEA 실무단 방북, 2.13 합의에 따른 북핵 시설 폐쇄.검 증 문제 등 협의
- ▲ 7.15 = 북 외무성, 중유 5만t 도착 확인하고 영변 핵시설 가동 중단 발표
- ▲ 9. 1~2 =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제2차 회의, 핵시설 연내 불능 화.전면 신고 합의 (제네바)
- ▲ 9.11~15 = 미·중·러 ‘북핵 불능화기술팀’ 방북
- ▲ 11. 1~ 5 = 미 북핵 불능화팀 방북, 불능화 조치 착수
- ▲ 11.27~29 = 6자회담 당국자 등 ‘북핵 불능화 실사단’ 북한 영변 방문

◇2008년

- ▲ 1. 4 = 북 외무성 “美에 수입알루미늄관 이용 군사시설 참관시켜..핵 신고서 작년 11월 제공”
- ▲ 6.26 = 북, 플루토늄 생산량 등을 적시한 핵 신고서 제출...미,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절차 착수
- ▲ 6.27 = 북, 영변원자로 냉각탑 폭파
- ▲ 7.10~12 = 6자 수석대표회담(베이징)..10월말까지 불능화.에너지 지원 완료 및 검증원칙 합의
- ▲ 8.26 = 북 외무성 대변인, 테러지원국 해제 연기가 10.3합의 위반이라며 ‘대응조치’로 영변 핵시설 불능화 중단과 원상복구 고려 한다는 입장 발표
- ▲ 9.19 = 북 외무성 대변인 “영변 핵시설 원상복구 중” 발표
- ▲ 10. 1~3 = 힐 차관보 방북, 핵 검증 원칙 논의
- ▲ 10.11(자정) = 미 국무부,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발표
- ▲ 12. 8~11 = 6자 수석대표 회동..성과 없이 휴회, 검증의정서 채택 실패

◇2009년

- ▲ 4. 5 = 북, 장거리 로켓 발사
- ▲ 4.14(뉴욕 4.13) = 유엔 안보리 전체 공개회의 열어 의장성명 공식 채택
-북 외무성 성명, 6자회담 불참.핵시설 원상복구 방침 천명
- ▲ 4.18 = 북 총참모부 대변인 “PSI는 선전포고” 거듭 주장
- ▲ 4.25 = 북 외무성 대변인 “영변 핵시설 폐연료봉 재처리작업 착수” 발표
- ▲ 4.29 = 북 외무성 성명, 핵시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경고
- ▲ 5. 8 = 북 외무성 대변인 “대북 적대 美와 대화 무용” 입장 발표
- ▲ 5.25 = 북, 2차 핵실험 감행



- ▲ 6.11 = 북 2차 핵실험 실시에 따른 유엔 제재결의
- ▲ 6.13 = 북, “우라늄 농축작업 착수” 선언(외무성 선언)
- ▲ 9. 3 = 북,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전달한 편지 통해 “우라늄 농축 시험 성공” 주장

◇2010년

- ▲ 5.12 = 북 “자체 기술로 핵융합 반응 성공” 주장 (노동신문)
- ▲ 10. 8 = 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보고서 통해 “북, HEU개발 실험실 단계 넘어” 주장
- ▲ 11.17 = 잭 프리처드 미국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 “북한이 2012년 목표로 영변 지역에 100MW 규모의 실험용 경수로 건설 추진 중”
- ▲ 11.21 = 지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 “9~13일 방북시 영변에서 수백개의 원심분리기가 설치된 것 목격”

nomad@yna.co.kr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0/11/21/0503000000AKR20101121050200043.HTML>